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인노련)



## 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운동

- I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강령
- II 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운동(노병직 : 변호인 심문 중에서)
- III 노동자 계급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신동수 : 항소 이유서 중에서)
- IV 사멸해가는 역사의 유물에 의해 산 인간이 심판받을 수 없다  
(노희찬 : 항소 이유서 중에서)

##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 ◇활동 개요◇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이하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 해방과 민중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인천·부천 지역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정치 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7년 6월 26일 결성되었다.

활동 내용은 대략 노동 조합 운동에 대한 지도·지원, 당면 정치 투쟁의 조직,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화, 조직화를 위한 활동,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한 노력 등으로 요약,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노동 조합 운동에 대한 지도·지원 활동은 89년 7,8월 투쟁 이래 본격적으로 개화된 노동자들의 자생적인 투쟁과 노동 조합 결성 움직임에 주목하고, 그것이 올바른 노동자 계급의 사상인 과학적 사회주의와 결합할 수 있도록

매시기 노동 조합 운동의 현황에 대한 평가 및 전망, 그 합법칙적 발전 대안을 제출하고 노동 조합 운동의 올바른 이념 정립과 단일한 대오 구축에 일조하였다. 87년 7,8월 투쟁 직후 지역 민주 노조 협의회 건설안의 제출, '88년 임금 인상 투쟁을 노동법 개정 투쟁과 결합·전화시키자 '88년 하반기 노동법 개정 투쟁의 성과를 노동 조합 운동의 전국적 대오 구축으로 수렴시키자'는 등의 대안 제출, 전노협의 성격과 임무, 건설 방안을 밝히고 민주 노총, 산별 조직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 등은 노동 조합 운동에서 인노련의 빼놓을 수 없는 공헌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인노련은 매시기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운동 단체 및 다른 계급, 계층과 연대하여 올바른 전술을 수립하고 정치 투쟁을 조직하는데 적극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와 국회 의원 총선 시기의

활동을 간과할 수 없다. 6월 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지배 계급이 위기 수습책으로 6·29 선언을 발표한 직후, 민족 민주 운동 진영은 변화된 정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크게 동요하였고, 심지어는 부르조아 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하는 등 파행을 거듭할 때, 인노련은 독자 후보 전술과 '민중의 당' 활동을 통해 민중 운동의 진로를 올바르게 제시하였다.

한편, 인노련은 창립초부터 88년 여름까지 두 개의 기관지, 『정세와 실천』과 『노동자의 길』을 발간하였다. 『정세와 실천』은 노동 운동·민중 운동의 주요 이론적·전술적 쟁점을 다룬 선전지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노동자의 길』은 파업 현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탐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매주 발간된 노동자 대중 신문이었다. 이 두 기관지는 88년 여름에 진행된 토론의 결과로 전면 개편되었다. 단순한 '대중 신문'이 아니

라 '선진 노동자를 위한 신문'을 발간할 것을 결정하여 『정세와 실천』을 폐간하고 『노동자의 길』의 체제와 내용을 바꾸었다. 새로운 『노동자의 길』은 민중 운동·노동 운동에 대한 당면 실천적 지침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노동 운동의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선진 노동자들의 계급적·정치적 각성을 촉진하고 매춘·주박 문제 등 현실의 제반 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노동자들이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노동자의 길』은 학습 모임·독서회·시사 토론회 등 노동자들의 조직 사업과 결합하여 집필, 제작, 배포되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노동자 정당 건설의 인적·사상적·물질적 토대를 구축해가는 제반 과정이었다. 인노련은 노동자 계급의 정당 혹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혁명적 조직 없이는 '전략'도 '민중 민주 전선'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지역 차원에서나마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 운동을 결합시키려고 전력하였다.

또한 인노련의 일부 역량과 뜻을 같이하는 그룹이 함께 준비하여 89년 8월에 창간된 『사회주의자』는 인노련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노동 운동의 전면에 내걸고 현실 운동 전반에서 전국적 전망을 확보한다는 문제 의식 아래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신속한 폭로와 해설을 하며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혁명적 노동 운동 역량간의 경험과 문제 의식의 교류를 매개함으로써 노동자 정당 건설의 조직적·사상적 기초를 쌓고자 발간된 정치 신문이다. 『사회주의자』는 89년 10월 16일에 발생한 인노련 사건의 여파로 조직원 일부가 구속, 수배되어 4호까지 발간되고 현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 ◇사건 개요◇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사건은 1989년 10월 18일 17명의 맹원이 연행, 구속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제히 들이닥친 치안 본부 대공 분실 요원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20일간의 밀실 수사를 받았으며 수많은 자료와 서적, 사무 기기, 인쇄기 등을 빼앗겼다. 이어 12월에는 4명이 추가로 구속되어 〈인노련〉 사건 총구속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노동자 정치 조직 〈인노련〉 탄압에 대한 항의는 1차 구속 사태 후 곧바로 일어났다. 구속자 가족은 물론 '부천 지역 노동 조합 협의회', '인천 지역 노동 조합 협의회', '인천 지역 민족 민주 운동 연합' 등의 대중 조직에서 각각 〈인노련〉 탄압의 부당성을 외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심 재판 때는 김진균 교수 등 교수 147명과 권호경 목사 등 목사 85명이,

'폭력 혁명', '이적 단체' 운운하는 검사 측의 논리에 대항하여 "소수 독점 재벌의 손에 우리 사회의 엄청난 부가 집중되고 그로 인해 많은 폐해가 야기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주장한 〈인노련〉의 활동은 정당한 일면이 있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이 활동을 지지했다.

구속자들은 1, 2심 재판의 전과정을 통해 시종 일관 〈인노련〉 활동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적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최후 진술」, 「항소 이유서」 등을 통해 '남한 사회주의자'로서의 개인과 조직의 입장을 천명하는 곳곳한 재판 투쟁을 벌였다.

91년 1월 현재 총구속자 21명 중 일부만이 집행 유예, 만기 출소로 석방되었고, 아직도 10명이 실형 신고를 받고 복역중이다. 다음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18명 맹원들에 대한 소개다.

- 오동렬(1960년생)  
1983년 레이건 방한 반대 시위로 1년 6월 선고  
대중공업사 근무  
인노련 총무부장, 상임 집행위원장  
(징역 3년, 자격 정지 3년, 군산 교도서 복역중)
- 윤철호(1961년생)  
1983년 레이건 방한 반대 시위로 1년 6월 선고  
서흥(주) 근무  
1988년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인노련 교육 선전부장  
(징역 2년 6월, 자격 정지 2년, 의정부 교도소 복역중)
- 노병직(1953년생)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전, 인노련 중앙 위원  
전노협 정책실 부장  
(징역 2년 6월, 자격 정지 3년, 공주

- 교도소 복역중)
- 노희찬(1956년생)  
대림보일러, 금화공업사 등 근무  
전, 인노련 조직국장  
(징역 2년 6월, 자격 정지 2년 6월,  
청주 교도소 복역중)
  - 정종주(1963년생)  
1986년 민정당 연수원 점거로 징역  
3년 6월 선고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 원주 교도  
소 복역중)
  - 최병국(1962년생)  
대림통상 근무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 안동 교도  
소 복역중)
  - 이현영(1961년생)  
(징역 2년, 자격 정지 2년, 춘천 교도  
소 복역중)
  - 최건설(1962년생)  
태을금속 근무  
(징역 1년 6월, 자격 정지 1년 6월,  
광주 교도소 복역중)
  - 이면재(1961년생)  
(징역 1년 6월, 자격 정지 1년 6월,  
의정부 교도소 복역중)
  - 김진희(1962년생)  
한비산업 근무  
(징역 1년 6월, 자격 정지 1년 6월,  
목포 교도소 복역중)
  - 권우철(1960년생)  
인천 지역 노동자 복지 협의회 활동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 신동수(1963년생)  
1986년 학원 안정법 반대 시위로  
1년 6월 선고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 이태주(1965년생)  
1986년 민민투 사건으로 구속  
대흥공업사 근무  
1988년 구청협 사건으로 구속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 김용숙(1963년생)

- 인쇄소 청타수로 8년 근무  
(징역 1년 6월, 자격 정지 2년, 집행  
유예 3년)
  - 최남기(1960년생)  
경동산업 근무  
사랑방 상담소 상담원  
새날 상담소 상담원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2심 계류 중 구속 취소)
  - 김창덕(1963년생)  
1982년 경신공업 해고  
사랑방 상담소 상담원  
새날 상담소 상담원  
(징역 1년, 자격 정지 1년, 집행  
유예 2년)
  - 김혜인(1964년생)  
1986년 부산 미문화원 점거로 구속  
삼기전자 근무  
(징역 10월, 자격 정지 10월, 집행  
유예 2년)
  - 심은남(1963년생)
- 삼기전자 근무  
(징역 10월, 자격 정지 10월, 집행  
유예 2년)





###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 강령\*

#### I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마침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자유 발전의 광야 앞에 서게 되었다. 그 환희에 찬 해방의 시점에 우리 나라는, 이전 제국주의 및 친일 자본가와 지주의 가혹한 착취·수탈하에 노동자, 농민이 신음하던 식민지적·반봉건적 상태를 극복하고, 자주적 민중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더 이상적인 사회로 무한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중적 기초로 하는 혁명 역량이 오랜 항일 민족 해방 투쟁으로 단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8.15 해방의 시기에  
우리는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무한히  
발전해 갈 수 있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혁명의 확대·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야심으로 우리 나라의 남쪽 반을 점령한 이래, 미제국주의는 자본가와 지주, 친일 관료 등 반동적 세력들의 보호자가 되어 그들을 극력 지원·육성하는 한편, 통일된 민중

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동자와 농민의 혁명 투쟁을 온갖 수단으로 억압하였다. 그리하여 이북에서 토지 개혁 등 제 민주 개혁(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순조로이 완료한 1947년초 이후에도 이남에서는 혁명적 민중이 미군정의 탄압과, 월남한 지주·친일파의 합세로 강화된 우익 반동 세력의 광란적 백색 테러에 맞서 싸우지 않을 수 없었다. 1948년 8월 15일, 우익 반동 세력은 미제의 비호와 지원 아래 이남에 친미적 자본가 정권(이승만 정권)을 세우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자 않고, 이 나라가 분단된 자본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혁명적 민중은 불굴의 무장 항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렇게 이남에서 계속되던 양대 세력간의 투쟁이 전국적 규모의 계급 투쟁으로 확대되어 노동자·농민의 승리가 결정적이었던 순간에, 미제국주의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한국 전쟁'의 3년이 시작되었다.

이 전쟁에서 극악 무도한 미제국주의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맞먹는 물량을 퍼부어 수백만 민중을 살해하면서 우리 나라가 통일된 민중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였으며, 1953년 휴전과 함께 분단은 완전히 고착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 대대적 계급 투쟁, 민족 해방 투쟁, 양대 진영간의 전쟁에서 최대의 희생자가 된 남한의 노동자, 농민은 비참한 패배자, 포로의 신세가 되어 총칼뿐만 아니라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 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현대 남한 사회라고 하는 한 사회는 생성되었다. 그리고 이후 오랜 기간 자본가 계급이 노동자와 농민에 대해 무제한 착취와 수탈을 자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 주어졌다.

이러한  
이남의 상황에  
미제국주의가  
개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한국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 1989년 2월 20일 개정.

II

승리한 자본가들은 그들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노동자를 착취하고 민중을 수탈하여 자본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근대적 기계 설비를 갖춘 대기업들이 도시 영세 소생산자들을 몰락시키고 많은 농민들을 농촌에서부터 대도시와 공업 지대로 끌어내 노동자로 바꾸면서 급속도로 증가해 왔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이러한 급격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자본가들의 부와 사치의 거대한 성장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빈곤과 억압의 더욱 빠른 성장을 의미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성장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 이미 노동자 계급은 남한 인구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기계, 공장, 토지, 건물, 은행, 광산, 어선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생산 수단을 소수 자본가의 손아귀에 집중시키고 전민중을 무산자화시켜 온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은, 노동자들에게 현실서하에서의 계급 상승의 환상을 가질 수 없게 하고 단결과 투쟁만이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인간다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 경험한 체험을 통해, 또한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전생활을 바칠 것을 강요하면서도 앞날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는 자본의 억압과 착취의 실상을 깨닫게 된 지금에

자본의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실상을 알게 된 노동자들에게 이제 단결과 투쟁의 욕구가 불타오르고 있다

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단결과 투쟁의 욕구가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다. 노동자 계급은 고립적인 투쟁으로부터 전계급적인 해방 투쟁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저 격렬하고 전투적인 투쟁을 보라! 그 속에서 약동하는 계급적 연대 의식과 계급적 자각의

꿈틀거림을 보라!

노동자 계급은 노예의 쇠사슬을 스스로의 역센 팔뚝으로 끊고 오랜 포로의 체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이상 자본가가 노동자에 대해 무제한한 착취를 자행할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본격적인 계급 투쟁의 시대가 다시 왔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제 비로소 노동자 계급은 스스로를 계급으로 조직하려 하고 있으며, 빼앗겼던 계급 투쟁의 무기들을 다시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자신의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노동자 계급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의 종착점은 스스로의 완전한 해방,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다.

이제는 더 이상 자본가의 무한한 착취가 불가능한 시대가 왔음을 우리 노동자 계급은 선언하고 있다.

III

적산의 불하, 원조 물자의 배분, 차관의 도입 과정을 통해 미군정, 이승만, 박정희 독재 권력, 관료와 결탁했던 친일·친미파 소수 정삼 모리배들이 일찍부터 독점 재벌의 그룹을 형성해 왔으며, 그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는 뇌물 수수, 매수와 특혜 등 온갖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는 자본가 상호간의 경쟁은 새로운 독점 재벌을 탄생시켜 왔다. 그들은 전자본가 계급의 두목이 되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위험한 작업 환경과 과학 기술을 동원한 감시 체제로 노동자 계급을 노예화시키고, 그 고통을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이미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일 독점 자본은 그 강대한 자본의 힘으로 남한 경제를 자신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예측시키고 불평등한 교역 관계를 강요하면서, 남한 노동자가 생산해 낸 부를 강탈해 갈 뿐만 아니라 직접 남한에 자본을 투자하여



많은 남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 독재 정권은 미·일 독점 자본 및 국내 독점 자본들의 공공연한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들을 노예적인 무권리 상태에 묶어 두고 무한정한 착취를 보장하고 있다.

독점 재벌과 미·일 제국주의,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은 노동자 계급의 고통을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완전한 해방의 쟁취를 위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이며 모든 정치적 반동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노동자 계급이 완전한 해방을 위해 나아가기에 있어 당면한 쟁취해야 할 목표는 미·일 등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남한 민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구조를 깨뜨리고 완전한 민족 해방을 쟁취하는 것, 또한 한중도 안 되는 소수 독점 자본가와 군부 독재의 지배 체제를 깨뜨리고 민중 민주주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은 모든 민중과 힘을 합해 미·일 등 제국주의 독점 자본과 국내 독점 재벌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와 민중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파쇼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하여야 한다. 외국 농축산물의 무분별한 도입,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저급 가, 독점 자본의 무자비한 수탈 속에 장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빗만 늘어가고 있는 농민, 독점 재벌의 부동산 투기에 최후의 보금자리마저 강제 철거당하고 있는 도시 빈민,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오로지 군부 독재와 독점 자본을 위한 거짓된 교육과 선전만을 강요받고 있는 청년 학생·지식인, 모든 산업 분야에 뺨치고 있는 독점 자본의 착수에 밀려 무산자로 몰락해 가고 있는 소생산자들, 이들 모두는 노동자들의 독점 자본과 제국주의,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투쟁의 지지자이며 동반자이다.

IV

인노련은 당면한 민족 해방과 민중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인천·부천 지역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 부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노련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바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 정당의 건설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한편으로, 인노련은 파쇼 정권에 반대하여 싸우는 모든 계급·계층 및 정치 세력과 적극 연대할 것이며, 특히 전민중의 정치적 통일 조직을 형성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V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인노련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한다.

- 1)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 노동권 보장이며, 모든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아무런 제약 없이 누려야 한다.
- 2) 노동 조합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 노동자들의 정당의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 보안법, 정당법 등의 정치 활동 보장 악법은 폐지, 개정되어야 한다.
- 3) 연장 근로를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시켜 8시간 노동제를 8시간 노동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기술적 이유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작업(오후 10시부터

- 오전 6시까지)은 금지되어야 한다.
- 최저 임금제 4) 최저 임금제는 작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최저 임금은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져야 한다.
  - 차별 금지 5) 학력별·직종별 임금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 6) 취업 및 그 지속, 인사 관계, 임금 등에 있어 성적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 여성 취업 보장 7) 공영 탁아소를 충분히 설치하여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취업을 보장하며, 산전 산후 총 6개월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 8) 산업 재해와 직업병을 몰아낼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 농가 부채 일소 9) 정당한 농수산물 가격을 보장하고, 외국 농축산물 도입을 억제하며, 농가 부채를 일소하여야 한다. 또한 소작제도, 농지 임대차, 비농민의 토지 소유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 10) 영세 상인, 도시 빈민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독점 재벌 해체 11) 권력과 결합하여 민중의 피땀을 가로채고 민족 경제를 팔아먹어 온 독점 재벌은 해체되고, 기간 산업은 국유화되어야 한다.
  - 외국 자본 국유화 12) 직접 투자, 또는 차관의 형태로 들어와 우리 노동자와 민중을 착취·수탈해 온 일체의 제국주의 자본은 몰수, 국유화되어야 한다.
  - 의무 교육 13) 고등 학교까지를 의무 교육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의료 보장 14) 의료 보장 제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 무주택자 일소 15) 건물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임대 주택을 건설하여 무주택자를 완전히 일소하여야 한다.

- 16) 국가 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모든 반민주적 악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 권리는 유보 조건 없이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 기본권 전면 보장
- 17) 국가 안전 기획부, 국군 보안 사령부, 치안 본부 대공 분실, 전투 경찰 등 살인, 고문, 폭행, 불법 연행, 감금을 일삼아 온 반민주적 억압 기구는 해체되어야 한다. 억압 기구 해체
- 18) 민중을 억압, 착취하고 고문, 강간, 살인을 일삼아 온 범죄자들과 그 협조자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재산 몰수, 처벌, 재교육되어야 하고, 구속된 노동자를 비롯한 민주 인사와 양심범들은 모두 석방되어야 한다. 구속자 석방
- 19) 미·일 제국주의와의 불평등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조약 및 협정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모든 국가들과 자주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자주 외교
- 20) 미제가 강탈해 간 군사 작전권은 반환되어야 하며, 주한 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핵 기지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무기는 즉각 철수, 폐기되어야 한다. 미군 철수
- 21) 남북한 상호 불가침 조약의 체결, 휴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의 전환, 군비 축소가 신속히 이루어져 평화 통일의 실질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평화 통일
- 22) 북한과 더불어 연방 정부를 수립하여 평화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을 확보해 나가고 완전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세워야 한다.



## □ 해설

인노련의 강령은 1987년 6월 26일 창립 당시에 발표된 이래 1988년 10월과 1989년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1989년 2월 20일의 개정은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정은 한 차례였다고 볼 수 있다.

1987년 6월 26일 창립 당시의 강령은 당시 인노련 창립에 참여한 여러 서클들(대별하면 속칭 '주사파'와 '비주사파'로 나눌 수 있다)의 타협·절충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 주요한 내용에서는 '주사파'의 주장이 대부분 관철되고 있었다. 그것은 양파의 단결을 위해서는 좀더 낮은 수준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었으며, 또한 이른바 '정치적 대중 조직'이라는 자기 규정의 애매함과도 관련이 있었다.

창립 이후 3개월간에 걸친 양파간의 격렬한 논쟁 과정에서 '주사파'는 '정치적 대중 조직'을 문자 그대로 대중 조직, 노동 조합과 동렬의 위상을 가지는 조직으로 생각한 반면, '비주사파'는 그것을 전위 조직에 가까운 것, 전위 조직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전위 조직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준전위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하여 '주사파'가 일관되게 '정치적 대중 조직'(또는 '정치적 대중 단체'—이는 '비주사파'의 '정치적 대중 조직'과 구분하기 위한 이름이다)이라는 조직 노선을 고수한 반면, '비주사파'는 스스로가 제출하였던바 (당시의 낮은 노동 운동의 발전 수준에서도 더 많은 역량을 조직·동원하여 노동자 계급의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을 지도할 수 있는) 전위 조직과 대중 조직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정치적 대중 조직'이라는 조직 노선의

문제점을 깨닫고 그 폐기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즉, 스스로가 미숙한 중심적 지도 역량이 '정치적 대중 조직' 바깥에 있고서는 '정치적 대중 조직'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반면, 중심적 지도 역량이 그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멘세비키적인 조직 노선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는 거의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정치적 대중 조직' 노선의 폐기는 6월 투쟁의 중단으로 격렬한 반파쇼 투쟁의 시대가 종결되고 정세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원래 우리의 '정치적 대중 조직' 노선은 거기에 어떠한 논리적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었던, '86년 후반부터 '87년 전반까지 계속 격화되어 가고 있던 전국민적 반파쇼 투쟁에 미숙한 역량의 혁명적 노동 운동이 개입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그 실천적·물질적 배경으로 하고 있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창립 3개월만에 열린 1987년 10월 대의원 대회에서는 장시간의 토론 끝에 정치 조직(즉 전위 조직)이라는 자기 규정과 민주 정부 수립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는 정치 노선이 강령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채택·결정되었다. (이 결정 이후, 즉 대회가 거의 종결될 시점에 '주사파' 대의원들이 뚜렷한 명분 없이 돌연 인노련으로부터의 탈퇴를 선언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 대회에서는 새로운 강령의 초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강령 개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제출되어 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회 직후에 대회의 결정에 따라 작성된 것이 『정세와 실천』 제3호에 발표된 '강령 초안'이었다. 당시 인노련에는 아직 얼마 안 되는 수의 발기자들만 가맹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이 가맹할 다수의 서클과 개인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강령을 확정짓기 위해 '초안'의 상태로 두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강령을 초안으로 발표한

것은 그것이 잠정적인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대의원 대회에서 자구의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형식 논리상의 이유도 개재되어 있었다.

이 초안을 1988년 10월 대회에서 검토·수정하여 확정·채택한 것이 『노동자의 길』 제32호에 발표되었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강령’이다. 이 강령 발표 후에 뒤늦게, 실수로 빠졌거나 표현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적 또는 발견되어 이를 보완·수정하여 1989년 2월 20일자로 다시 개정하였다.

이처럼 강령 개정의 과정은 복잡하였지만 그 기본 방향은 1987년 10월 대회에서 주어졌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이를 좀더 풍부하게, 명확히 하는 과정이었다. 그만큼 인노련의 역사에서 1987년 10월 대회의 의미는 큰 것이다.

1989년 2월 20일의 2차 개정으로써 인노련의 강령은 확정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인노련의 전성원은 이 강령에서 명시하고 있고 요구하고 가리키고 있는 바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다. 이 강령에는 한 집단으로서의 인노련의 견해와 주장이 집약되어 있으며, 인노련의 활동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인노련 모든 성원의 선전 활동·선동 활동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으며, 투쟁의 기본 방향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노련의 ‘정치 노선’에 대해 알아보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강령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는 독자들에게 이 강령만큼은 한 자 한 자 세심히 읽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만, 왜 ‘아’라고 쓰지 않고 ‘어’라고 썼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 주시기 바란다. (예를 들면 1945~1953년의 시기에 대해서는 이남, 이북이라고 표기하고 전후 시대에 대해서는 남한, 북한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의 현대사관이 드러나고 있다.)

인노련의 강령은 인노련이 우리 나라 혁명적 노동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진정한 프롤레타리아적 조직 생활의 기풍 수립에의 기여, 반제 반파쇼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의 전술의 풍부화에의 기여, 본격적 사회주의적 실천의 제창과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 선전의 새 영역 개척 등) 중의 하나다. 이것은 남한의 혁명적 노동 운동—사회주의 운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소한 한 유파의 잠정적 강령으로 되고 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자.

제1장은 현대 남한 사회의 생성 과정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제2장은 현대 남한 사회의 발전 과정을, 그 가장 중요한 동인인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의 성장, 노동자 계급의 계급 투쟁의 발전과 그 궁극적 목표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노동자 계급의 당면한 투쟁의 목표와 그 투쟁에서의 동맹군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인노련의 활동 목적과 성격을 밝히고 있으며, 제5장은 인노련의 선동 활동의 내용(이는 노동자 계급의 당면 투쟁의 일반적인 슬로건이기도 하다)을 열거하고 있다.

제1장 현대 남한 사회의 생성 과정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우리의 독특한 사관을 보여 주고 있다.

① 1945~1953년은 19세기 후반 이래의 우리 나라 근대사를 그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역사적 전환기, 과도기다. 1953년 휴전과 함께 분단은 완전히 고착되고, 이로써 우리 나라의 근대 후기사는 시작되었다. ② 1945~1950년 시기, 이북에서의 혁명의 순조와 이남에서의 혁명의 곤란은 상호 관련되어 있다. ③ 1948년 8월 15일, 이남에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친미적 자본가 정권이다. ④ 한국 전쟁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계속되어 온 계급 투쟁·민족 해방 투쟁의 연장이며, 그 최고·최후의 단계다. ⑤ 1945~1953년간의 투쟁에서 패배한 남한의 노동자와 빈농은 계급 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겼다. 이러한 계급간의 힘 관계의 근본적 변화는 이후 현대 남한 사회의 발전 과정의

특수성을 규정한 내적 요인이 되었다. 전쟁을 전후한 계급간의 힘 관계의 변화의 크기와 깊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남한 사회와 그 발전 과정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없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추가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흔히 우리 나라 현대사를 1945년부터 기술하고 있다. '시대 구분은 사관의 문제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역사 서술은 우리 나라 현대사의 연구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무엇을 과제로 하는가에 대한 자각적 의식(사관)이 없거나 잘못된 경우일 것이다. 그것은 필연코 초점 없는 연구나 정확하지 못한 초점을 가진 연구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바 현대사 연구의 과제는, 미제 폭탄에 의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은 다 죽은' 남한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에 따라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사회적 모순이 발생 또는 발전하고, 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953년 이후를 근대 후기 또는 현대(세계사적으로 근대라는 말에는 자본주의 시대, 현대라는 말에는 사회주의 시대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근대 후기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바 현시대라는 의미로서는 현대라고 해도 무방하겠다)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사관은 종종 주관적 관념론자들로부터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역사의 단절'을 과장하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사, 정치사, 문화사 중의 하나, 하다 못해 어떤 사람의 개인사 연구라도 진지하게 해 보라. 누구의 생각이 이데올로기인가는 금방 밝혀질 것이다. '역사의 단절'을 과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역사의 단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극복할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② 흔히 이북에서의 혁명의 순조와 이남에서의 혁명의 곤란은

각각 소련군의 진주와 미군의 점령이라는 외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된다. 그 시대의 출발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충분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조만간 이 외적 조건은 내적인 모순의 발전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즉 이북에서 혁명이 신속히 진전됨에 따라 지주, 친일파가 무더기로 월남하게 된다. 이러한 지주, 친일파, 부르조아적 요소들의 월남은 이북에서의 혁명의 진전을 한층 순조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즉 심각한 계급 투쟁이 없이 혁명은 진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에 월남한 반동적 세력들은 이남에서의 혁명의 진전에 커다란 장애로 등장하게 되었다. '빨갱이'들에게 조상 대대로 터 잡고 살던 고향과 토지와 사회적 지위를 빼앗기고 쫓겨 내려 온 지주, 친일파는 이남의 우익 반동 세력의 전위 세력이 되었다. 그들은 계급적 적대감으로 불타오르는 반공 세력의 돌격대가 되었다. 제주도 4·3 항쟁에서 민중을 가장 잔인하게 살상한 것은 군대도 경찰도 아니고 서북 청년회였다. 월남한 우익 반동 세력은 이승만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파쇼·극우 정권의 튼튼한 지주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북에서의 혁명의 순조와 이남에서의 혁명의 곤란의 상호 관련은 흔히 간과되고 있는바, 이 사실을 간과하고서는 이남의 노동자와 빈농의 이중 삼중의 고통과, 나아가 현대 남한 사회를 이해할 수 없다.

③ 이승만 정권을 단순히 미제의 괴뢰 정권이라 하지 않고 친미적 부르조아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괴뢰'라는 말이 이승만 정권 내지 이후의 남한 부르조아 정권의 대미 종속성을 폭로 비판하는 선동적 언어로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전적·과학적 용어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것은 남한의 국가를 제국주의의 민족 지배 도구로서 본다는 간단하고 일면적인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남한에서 국민 국가의

실체를 부정하고 남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 현상을 '미제의 음모'로 보는 관점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의 단순성과 비과학성은 이미 우리의 뼈아픈 경험들에 의해 충분히 폭로되었다. 남한 정권의 주인은 미제이며 남한 정권의 모든 행위가 미제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생각이 현실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인식하는 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는 1987년 이래의 정치 정세를 판단하는 데서 '주사파'가 보여준 무능함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는, 남한 국가는 기본적으로 부르조아지 또는 그 일부파의 계급 지배 도구라고 생각한다. 즉 남한 국가 역시 국가의 보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종속성은 하나의 특수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1948년 이후 40년간의 역사에서 그 종속성의 양과 질은 계속 변해 왔다고 본다. 국가 예산의 반 이상을 미국 원조에 의해 충당하던 시절, 미 국무부의 하급 관리가 예산 편성에 직접 간섭하던 1950년대와, 양국 부르조아지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여 양국 정부가 무역 협상을 벌이는 1980년대 후반의 상황은 크게 다른 것이며, 그간에 종속성의 양과 질은 많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소부르조아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국가의 종속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은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자 하는 부르조아지와 그 위원회(정부)에 의해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한미 관계의 재정립'을 부르짖는 관리들과 부르조아 이데올로그들은 '적당한 반미는 좋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④ 한국 전쟁을 보는 관점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내전의 연장, 그것의 전국적 규모로의 확대, 즉 확전으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한국 전쟁을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것으로 볼 때는 북침설, 남침설의 논란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며, 그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한국 전쟁은 계급 투쟁, 민족 해방 전쟁, 양대 진영간의 전쟁이

라는 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세 측면 중 일면만을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특히 지금까지 계급 투쟁이라는 측면은 간과되어 왔다. 소부르조아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아무리 엄연한 객관 현실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엠엘주의 진영' 일부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남한 사회의 혁명을 중심으로 보지 않은 잘못된 행위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전후의 기준으로 전전 시대의 일을 선불리 판단하는 것이 될 우려는 다분하다. 당시에는 아직 남한과 북한이 두 사회가 아니었고 단지 두 지역이었을 뿐이었다. 분단은 아직 기정 사실이 아니었다. 분단은 대다수 민중에게는 아직 '현실'이 아니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 기지론' 역시 당시의 조건에서는 기본적으로 옳은 논리,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논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러한 비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것이며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에 응답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비판이 정세 판단과 전술상의 오류라는 차원에서 제기될 때만이 전전 세대는 우리에게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쟁의 종결로 혁명적 정열과 이상이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던 한 시대는 (우리 나라의 반, 남한에서는) 끝이 났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⑤ 1945~1953년간의 투쟁에서 패배한 남한의 노동자와 빈농은 "비참한 패배자, 포로의 신세가 되어 총칼뿐만 아니라 정당, 조직, 지도자, 사상을 포함한 계급 투쟁의 모든 무기를 빼앗기고 오직 생존만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즉 노동자와 빈농은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이다. 그리고 빈농은 무장 해제의 대가로 약간의 토지를 얻었다. 또한 지주는 그 격렬한 사회적 변화와 농지 개혁으로 일부는 몰락하고 일부는

자본가로 변신하는 등으로 해서 소멸되었다. 이로써 남한에서는 자본가 계급과 이해 관계가 대립되고 자본가 계급에 저항할 수 있는 계급이 소멸(지주)하거나 무장 해제(노동자와 농민)됨으로써 세계사상 유례 없는 자본가의 천국이 실현되었다. 자본가의 천국, 이것이 바로 '자유 대한민국'의 본질이다. 전후 남한에서의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은 노동자와 농민의 무장 해제, 지주의 소멸로 자본가의 자본 축적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타계급의 저항이 미약하다는 이러한 조건에서 가능했다. 그리고 이 조건이, 종속국들 가운데에서도 남한이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이나 필리핀 등과 다른 특수성이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남한 사회관과 사관의 독특한 측면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은 그 자체가 계급 투쟁의 과정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2장에서는 남한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 노동자 계급의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가져왔음을, 그리고 1987년 7, 8월 이후 노동 운동의 고양 속에 노동자 계급이 빼앗겼던 계급 투쟁의 무기들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 나가면서 전진해 나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진의 궁극적 목표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임을 선언하고 있다.

다른 계급과 공유할 수 없는 노동자 계급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은 계급과 계급 대립의 철폐, 자본주의 착취 제도의 철폐와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에 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져야만 노동자 계급은 단순히 착취받고 억압받는 대중이 아니라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역사 창조의 주체로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도 다른 계급 계층에 앞서 나아가고, 그들을 영도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질 것이다. 스스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착취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노동자의 자연스런 계급적 각성의 귀결 점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육과 선전은 그러한 각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자본주의 착취 제도의 철폐와 사회주의의 실현이라는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 노동 운동의 궁극적 목표를 '스스로의 완전한 해방,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라고 표현한 데에는 노동자 계급의 계급 의식의 발전 수준에 대한 고려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노동자 계급의 선진적 부분, 전투적 민주 노조의 위원장이나 간부들도 아직 반공 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인노련은 바로 이런 선진적 노동자들 속에서 활동하고, 그들을 좀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노동자 혁명가로 양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노련의 성격과 활동 목적을 밝히는 공식 문서에서 그러한 운동의 현재 조건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조직의 명칭을 '인천 지역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라 하지 않고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이라 부르는 데 만족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제3장에서는 노동자 계급이 완전한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한 민족 해방과 민중 민주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파쇼 권력을 타도하고 민중 민주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가진 당면 혁명 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의 동맹군이 농민, 도시 빈민, 청년 학생, 지식인, 소생산자들임을 말하고 있다. 즉 당면 혁명의 단계와 과제(반제·반독점·반파쇼), 그리고 거기에서의 노동자 계급의 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동맹군 가운데 중소 자본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그들이 반제·반독점·반파쇼 투쟁에서 일관된 태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동맹군들과 더불어 같이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며, 그 계층과의 제휴·연대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

다. 여기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노동자 계급이 그들 계층을 견인하기 위해 그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태도로 임하는 것은 때로 필요하다고 본다.

제4장에는 인노련의 활동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그것은 ① 인천·부천 지역의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노동자들의 정치 의식을 발전시킨다, ② 여러 형태의 대중 조직을 촉진시키며 노동자들의 모든 투쟁을 발전시킨다, ③ 노동자 정당 건설에 복무한다, ④ 전민중의 정치적 통일 조직의 형성에 기여한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인노련이 실현하기 위해 투쟁할, 각 계급·계층의 요구, 전민중적 요구들을 열거하고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노동자의 요구이며, 제9항은 농민의 요구, 제10항은 영세 상인 및 도시 빈민의 요구이고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는 경제, 교육·의료·주택 문제, 정치, 외교, 군사, 통일에 관한 전민중적 요구들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당면 혁명에서의 사회 개조의 구체적 내용들이기도 하다. 그 내용은 분명히 민주주의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철저한 민주주의자인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민중 민주주의)의 구체적 내용이며, '완전한 민족 해방'의 내용이다.

## 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운동

### \*취업 동기

72년 10월 유신이 있던 해였다. 독재 정권이 본격적으로 군림하던 시기였다. 당시 사회 상황으로는, 울산 현대 조선 분규를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 대단지 사건에 대한 유혈 진압도 있었다. 전태일 동지의 분신도 있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발현된 것이다. 즉 박정권에 대한 불만이 사회에 팽배하게 된 시기였다. 노동자의 생활을 처음 접한 것은 교회 야학을 하면서부터였다. 본드를 만드는 어린 노동자들을 보면서 고된 일을 하고도 와서 영어, 노동법 등을 배우는 그들의 모습을 함께 하며 강학과 학생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 성북 경찰서에 열흘간 구류를 산 적이 있는데 그 야학 학생들이 조퇴해가면서 면회를 오곤 했다. 내가 더 깊이 관여하게 된 계기는 이러한 인간적 감화 등이 더 크게 작용했다. 공장 활동을 하고 노동자로 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밖에서 간접적으로 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직접 투신했다. 86년도부터 공장을 나와 밖에서 활동을 했는데, 같이 밥을 먹을 때 어린 노동자 친구들이 찌개를 끓이면 서로 국물만 떠먹고 고기만 남았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어린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속 깊은 생각이 있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노동자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잘 알아서 남을 도울 줄



알고 합리적으로 사회를 보는 눈이 짝튼다.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주역으로서 올바른 품성을 가지고 있는 게 노동자이며 때문에 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도 그들이 무권리 상태에 있다. 따라서 대학까지 나오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자문을 해주고 함께 가고자 함이 취업 동기다. 덧붙인다면 그 같은 일을 하게 해준 가족들의 힘이 큰 동력이 되었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는가**

북한이 남한 반파쇼 투쟁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우리 사정을 알 턱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주의 주장이 무엇인지 시급히 알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시각은, 엄연히 국민 국가로 형성되어온 구체적인 민중의 현실 생활, 독재 정권과 싸워온 남한 민중들의 투쟁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한 것 아니냐, 오히려 남한 운동의 어려움을 간과한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고려 연방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고 김대중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연구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며, 상대방을 인정하는 선에서 대화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러나 역대 정권을 보면,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고 박정희는 7·4 공동 성명 후 유신 독재를 했으며, 노태우는 북한과 상대하려면 조선 노동당보다 더 강력한 여당을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하여 합당을 했다. 이런 일들을 벌여 왔기에 “통일”하면 “탄압”을 연상하게 된다. 통일은 밀실에서 논의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북한이 반국가 단체인가**

검찰에서 반국가 단체, 이적 단체라 몰아 이렇게 법정에서

있다. 진짜 납득할 수 없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주권 국가의 길을 걸어왔다. 헌법에 영토를 북까지 표방한 것은 통일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 통치력이 미친 적이 한번도 없었다. “북한=반국가 단체”라는 등식은 정부 차원에서도 현실적으로 폐기된 상태이다. 이미 냉전 시대가 끝났다. 움직일 수 없는 조류가 되어 있다. 김영삼이 소련에 갔다. 박철언은 평양 축적 참관을 했다. 그런데도 이적 단체를 만들기 위해 “반국가 단체”란 규정을 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렇게 합법의 탈을 쓴 국가 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북한 또한  
주권 국가의  
길을 걸어 왔다

국가 보안법은 현실적 실체를 갖고 잘 판단하기보다는 북한을 걸고 조금만 연관이 있기만 하면 죄가 되게 만든다. 지금껏 냉전 시대의 판례는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면, 만약 인노련이 죄를 지었다면 헌법 질서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중심으로 처벌했으면 한다. “노동자 정당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노동자는 노예로 살아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차라리 이런 식이면 괜찮겠다.

**\*인노련이 추구하는 것과 북한 혁명 노선의 차이**

북한은 하나의 국가이고 인노련은 인천 부천의 한 서클이다. 따라서 이 둘을 바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있으나, 북한은 반제 반봉건적 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반독점 반독재 과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북한 중심으로 하다보니 “통일”을 지나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독재를 타도하는 문제를 중요시한다. 주체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북한의 논리는 남한에 적용하기 어렵다.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독재 타도  
문제가 중요

**\*인노련이 주장하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란**

현정치의 문제점은 헌법 제1조에 규정된 주권 재민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치 권력을 소수 정치 군부와 독점 재벌이 독점하고 있어서 민주주의가 독재에 합법의 탈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변하고, 이들 소수가 독점적으로 운용(장악)하고 있는 안기부, 보안사, 치안 본부, 전투 경찰, 각종 악법 등의 탄압 도구에 의해 민중이 정치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보통 선거권을 유린한 가장 현저한 예는 독재 민정당·노태우 정권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국회에 진출한 김영삼과 민주당이 '구국'을 회롱하면서 노태우 민정당 및 독점 재벌과 야합, 민자당을 만든 것,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노동 운동 탄압, 민중 운동 탄압과 정치범 구속이 그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①반민주적인 제도 개선(악법 철폐, 국민 소환권 보장, 지방 자치제 실시, 선거법의 개정 등) ②반민주적 민중 탄압 도구인 안기부, 보안사, 치안 본부, 대공 분실, 전투 경찰대의 해체 또는 축소 개편 ③노동자·민중의 정치 세력화이다. 노동자·민중의 정치 세력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의 두 가지가 형식적으로 해결되더라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이들 뜯어고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정치 세력화의 구심은 노동자 정당이다. 노동자 정당은 광범한 노동자 대중의 조직화를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어야 하고, 독점 재벌의 유혹을 뿌리치고 독자적인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조직력을 갖추기 위해서 광범한 대중 조직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은 실질적인 민중의 권력이라 할 수 있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는 헌법에 보장된 주권 재민의 원칙을 꺾기기로 만들고 있는 현재의 정치 체제를 극복하고 그 안에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소수 가진 자들의 정치 독점을 끝장내는 것이다.

노동자 대중의 조직화를 통한 독재 체제의 붕괴

\*인노련 가입 동기

87년 7,8월 대투쟁이 있었다. 당시 노동자 계급의 대중 운동이 획기적으로 성장했다. 첫째, 대선 때 독자 후보 전술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겼던 추진력이 있었으며, 둘째, 교조주의에 반대하고 "내 머리로 생각하자"하는 건강한 작풍이 있다고 생각되어 가입했다. 이는 인노련의 생명력이며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88년 10월 대의원 대회 사업 계획 중 엠엘주의 정치 사상 유파의 형성이란 의미

이 문제는 다른 나라 다른 시기에 정립된 이론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이를 우리 현실에 막바로 적용하려 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과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어 왔고 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자체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우리 나라의 특수한)에 기초하여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사회에 맞는 해결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노련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현재 자본주의 사회를 과학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의 길을 열어 놓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좀더 풍부히 함으로써 현실적 대안 마련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즉 사안별로 구체적인 현실 연구에 기초한 형식적인 대안의 축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마르크스의 이론은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자 동시에 하나의 출발점이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을 제시하여 그 법칙에 따라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길을 제시한 것으로서 하나의 집중된 고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이론은 이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





라 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학은 물론 사회학·정치학에 있어서도 학문의 일관성, 체계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마르크스주의를 어떤 완전한 것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신성 불가침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도는 각 지역, 나라, 시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것은 당사자의 과제라고 본다.

####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이적 행위

앞에서 말한 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인류의 공동의 자산이자 고전이라 할 수 있다.

일찍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팔아 생활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무권리 상태에서 비참하게 착취당하는 현실을 해결할 대안으로 제시된 각종 사상을 포괄적으로 사회주의라 칭해왔다. 사적 소유로부터 소외된 노동자의 노동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극복하고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주의는 현재 27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이러한 평등에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현실 사회 운동의 합법칙성 속에서 과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 마르크스였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공상에서 과학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88년 10월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 유파 형성의 합의는 현실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사회 변혁의 과제를 해결하자는 결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에 따라 조직 성원의 교양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마르크스 원전 학습 등의

평등에의 방침이 함께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 결정은 하나의 지향을 말하는 것으로, 지도부내의 합의에서 하나의 지도 방침이라 할 수 있으며 조직의 성격 변화가 아님은 강령 개정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찾고자 마르크스주의의 위치와 의의는 이런 정도의 것이다. 헌법에서

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의 길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 노동자 계급만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

### 1. 검사와 재판부의 논리 구조 —치기 어린 삼단 논법

검사와 1심 재판부는 사물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의 논리 구조는 치기 어린 삼단 논법에 불과합니다.

역지 논리로 일관한  
검사와 재판부의  
젓비린내 나는  
삼단 논법

[대전제] 북한 공산 집단은 반국가 단체로서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 갖은 책동은 다하고 끊임없이 남한 사회를 혼란시키기 위해 선전, 선동하고 있다.

[소전제] 그런데, 인천 지역 민주 노동자 연맹은 정부의 노동 정책과 제반 정책에 대해 이를 자본가 계급의 지배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와 노동 해방을 추구하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인노련의 활동은 정부의 정책에 반해 북한 공산 집단을, 결과적으로 이롭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북한 공산 집단을 이롭게 하고 북의 활동에 동조·고무·찬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 구조는 마치 “모든 사람은 현인이다”라는 결론을 낳는, ‘젓비린내 나는 삼단 논법’의 허점에 편승한 역지 논리에 불과합니다. 즉,

[대전제] 공자는 사람이다.

[소전제] 그런데 공자는 현인이다.

[결론] 고로 모든 사람은 현인이다.



라는 식으로, 북한이라는 반국가 단체(?)가 미제국주의와 군사 파쇼 매판 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 선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제·반독점 민족 해방 민중 민주주의 혁명 논리에 따라 활동한 인노련은 북한의 선전 선동에 동조하고 이를 고무 찬양한 것이나 매한가지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는 논법입니다. 공소장의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일반적이고 보편 타당한 명제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대전제]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공자는 사람이다’. [결론] ‘고로 공자는 죽는다’하는 식으로 보편적인 명제로부터 특수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삼단 논법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검사나 1심 재판부의 논법은 인노련의 활동과 북한의 역할에 대해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을 찾지 못하자 육해공 삼면 입체 군사 작전으로 무자비하게 전투 경찰을 투입하여 현대 중공업을 초토화시키듯이 역지 논리를 강변하며 인노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본인에게 실형 선고를 한 것입니다. 검사는 공소장이 대전제로 삼은 북한의 선전 선동을 일반 명제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판장님!



공소장 서두에 나오는 북한의 주장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일반 명제, 예컨대 '사람은 죽는다'라는 식으로 의심할 수 없는 보편 명제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따위 논리로 인노련을 이적 단체로 규정하고 본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공소장의 모두에 나오는 북한의 선전, 선동 내용이 인노련의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말인지, 일방적이고 억지 추향식으로 밀어 붙이지만 말고 차분하게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검사나 1심 재판부에서 이와 같은 밀어붙이기식 결론을 내리고 터무니없는 논리로 유죄 선고를 한 것이 '사물을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재판의 반영으로서의 사고'가 아니라 '관념'을 객관에 투영시켜 그것으로 '객관'을 단죄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한의 부르조아 지배 권력과 독점 자본에게 강력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히 변조하여, 우리가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단죄하려는 '관념'을 갖고 인노련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검사와 1심 재판부의 의도이며, 한정적 합헌 결정을 내려 국가 보안법을 유지시키는 파쇼 지배 권력의 숨은 음모인 것입니다.

인노련의 제반 활동은 북한의 선전, 선동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남한의 객관 현실을 분석하고 해명하여 노동자 계급의 진로를 방향짓는 데 전력할 뿐입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치 폭로를 통해 남한 사회의 모순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 의지를 고취함과 아울러 노동자 계급의 역할에 대해 노동자 대중이 자각케 하고 자본의 노동 착취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하고 폭로한 것이 인노련의 활동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인노련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지배 권력의 계급적 토대를 파헤치는 것이고 독점 차별과 지배 권력은 노동자 계급 일반에게 반자본 의식이 고취되고 노동 착취에 저항하는 일이

국가 보안법은  
무한한 착취를  
보장받기 위한  
자본과 지배 계급의  
공공이다

번발하는 등 여간한 위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자본가 계급의 계급 지배 도구로서의 국가 권력은 노동자가 자본주의의 비밀—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자본가 전유(專有), 임금 노동자의 노동 착취를 통한 자본의 증식—을 깨닫게 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본가에 의한 노동 계급의 일방적 노동 착취를 무한정 증식하기 위해서는 노동 운동을 탄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자본과 지배 권력이 전진공군하다가 만들어 낸 것이 냉전 의식에 편승한 국가 보안법입니다. 매카시즘적 흑백 논리로 재단하면 진보적인 운동은 모두 그 칼날에 베이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고 더욱이 자본주의의 비밀을 폭로하고 노동자 계급의 노동 해방을 부르짖고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진출을 북돋우는 조직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국가보안법의 재물로 안성마춤이었을 것입니다.

자본과 지배 권력은 인노련을 구속하여 인노련 조직을 와해시키려 함과 아울러,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의 조직과 노동자의 사상을 가지려 하는 일이(자본가 계급이 보기에)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경고하고 협박하려고 기도하였고, 이것이 인노련을 이적 단체로 내몬 본 사건의 핵심 내용이자 본질입니다.

## 2. 과학적 사회주의는 가장 올바른 노동자 계급의 사상이다.

「공산당 선언」, 「무엇을 할 것인가」, 『자본론』을 공동 학습한 사실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 것'이라는 검사와 1심 재판부의 논리에는 아연 실색할 일입니다. 마르크시즘은 대학에서도 공공연하게 강의되고

우리는 남한의 객관 현실을 분석하고 해명하여 노동자 계급의 진로를 방향짓는 데 전력할 뿐입니다



있는 것이고 과학적 사회주의란 자본가들의 대변자들이 유포한 온갖 허위 의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치열한 투쟁 속에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반영하여 수립된 것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의 과학이며, 노동자 계급 해방의 조건들에 관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와 노동 지배를 성취하기 위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로 무장하고, 부르조아의 관념을 노동자 계급에게 유포하여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가로막고 왜곡하고 있지만, 노동자 계급은 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사상적 무기로 자본의 실상을 꿰뚫어보게 되었고,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착취적 현실을 타개하려는 혁명적 실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 계급의 실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노동자의 사상, 노동자의 과학으로 무장하려는 것이 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르크시즘은 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역사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 모순을 해결해 나갈 방향을 제시해 준 학설이라는 사실에 많은 부르조아 학자들조차 공감하고 있으며 마르크시즘을 통하지 않고는 경제학·철학은 물론, 사회학, 정치학에서도 학문의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마르크스·엔겔스의 「공산당 선언」(1848. 2)과 마르크스의 『자본론』, 그리고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러한 과학적 사회주의의 체계를 세우고 노동자 계급이 처해 있는 현실을 과학적이고 명료하게 해명하며, 또한 노동자 계급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이 분야의 위대한 고전 중 몇가지일 따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150여 년 전에 발표된 저작들이지만 여전히 그 기본 정신과 방법론, 세계관이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검사나 1심 판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나 도식적으로 한국 사회 현실에 사상과 이론을 직수입하는 교조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상이라도 우리나라 현실에 기초하여 주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한 그 사상은 무의미한 것이 되거나 심지어 해악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우리 인노련이 북한의 몇마디 선전 선동에 근거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든 검사와 1심 판사의 단순 논리에 본인은 고소를 금치 못합니다. 토론티 학습에 익숙하지 않고 단순 암기식 공부에 길들여진 사람들에게는 그 따위 공소장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내용으로 생각되는가 봅니다.

『자본론』 등 마르크시즘 관계 고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독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황태연 선생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정밀히 읽고 숙고하는 것은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민중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우리 나라 특유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특유한 주체로서 우리는 이 원저작의 한국적 소화에서도 나름의 거대한 창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와 자본론 강의』, p. 12)

시대착오적이고 낡은 세계의 체제 수호자인 검사나 공안 당국 사람들에게는 이미 마르크시즘 연구와 창조적 적용은 부르조아 국가이든 사회주의 국가이든 체제를 가리지 않고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본론』을 번역 출판하고 계시는 서울대의 김수행 교수의 말에 대해 검사와 1심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 사상으로 무장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문명권 언어로는 최후의 번역일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야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남아공화국과 대만이 얼마전까지 우리와 함께 '자본론 금서 3국'이었습니다만 우리보다 빨리 풀렸죠. 공산주의를 그렇게 증오했던 히틀러도 이 책을 탄압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1990. 3. 22, 10명)

파쇼 체제의 태두(泰斗) 히틀러도 금압하지 않았다는 『자본론』이 한국 사회 현실에서는 이제야 번역 출판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 지배 권력의 실상을 웅변해 주고 남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김수행 교수는 『자본론』 출판이 이제서야 허용된 사실에 비감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비극적입니다. 김수행 교수는 대학에 갇혀 있느라 노동자 계급이 이 한편의 책을 읽으려면 얼마나 많은 파쇼 경찰의 감시를 피해다녀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강의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노동자 계급과 마르크시즘', '노동자 계급과 『자본론』'은 국가 보안법이라는 철책에 의해 분단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본론』 몇 장 학습했다고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하고 150여 년 전에 공포한 「공산당 선언」을 탐독했다고 수감을

노동하는 사람에게 과학적 사회주의는 유일하고 올바른 과학입니다. 채우는 이 현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르크시즘 관계 원전이 시중 서점 어느 곳에나 진열되어 있다고 해서 출판의 자유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본론 금서 3국 탈피', '마르크시즘 금지국에서 탈피'하는 식으로 판단하여 늦게나마 문명국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 계급은 자본과 파쇼 지배 권력의 이 교활한 숨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사상으로 흡수하며 전파할 것입니다. 일천만 노동자 계급을 모두 감옥에 가두고

자본가들이 두 팔 걷고 노동하지 않는 한,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의 비밀을 깨닫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자각하여, 당당하게 진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한,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의 음습한 비밀을 깨닫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역할을 떠맡게 되는 역사의 합법칙적 발전은 필연적입니다. 국가 보안법으로 이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천진난만하고 터무니없는 짓거리일 뿐이며 가랑잎을 타고 태평양을 넘으려는 무지몽매한 노릇일 따름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에게 과학적 사회주의는 유일하고 올바른 과학입니다. 이 엄연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국가 보안법으로 가두는 우매하고 전근대적인 형태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검사와 판사는 『자본론』을 학습했다고 구속하고 「공산당 선언」을 탐독했다고 유죄 선고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읽고 토론했다고 징역을 살리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노동 운동가들에게 계속 유죄를 선고하는 이 현실에 대해 후일 역사는 대한 민국을 『자본론』을 감옥에 가두고 '마르크시즘'에 수감을 채운 나라로 기록하며 개탄할 것입니다. 히틀러보다 더 무식한 파시즘 체제라고

우리 노동자 계급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과학적 사회주의를 흡수하고 전파할 것이다

### 3. 우리는 북한의 주도성을 부정한다

무엇보다도 인노련 기관지 「노동자의 길」을 41호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정치 신문 「사회주의자」를 4호까지 차분히 읽어본다면, 그 내용이 남한 사회의 현실을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진단하고 폭로한 것이며, 노동자 계급의 역할을 구체적인 실상에 비추어 제기한 것에 다름아님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듯 계급, 계급 투쟁, 혁명, 사회주의 등의 용어 몇 가지가 들어 있는 귀절이란 귀절은 몽땅 인용하

여 '봐라, 이렇게 유죄의 증거가 허다하지 않느냐'하며 공소장을 들이 밀지만, 그것처럼 무지하고 유치한 얘기가 또 없을 것입니다. 마르크시즘에 기초하여 남한 현실을 비판하고 해석한 것이 어떻게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우리나라가 수교를 맺고 있는 백수십개국의 나라들 대부분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수용되고 있고, 그 사상을 올바른 사상으로 정립하였다 해서 처벌받거나 포승줄로 묶이는 일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우리를 소련이나 동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 국가 혹은 유럽 등지의 사회주의 정당을 이롭게 한 것이라 하지 않고 왜 유독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판단하는지 그 논리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단 구조를 악용하고 부르조아 이데올로기로 세뇌하여 국민들의 단순 레드콤플렉스에 싸이게 한 다음, 북한이 악마의 상징인 듯이 규정해 놓고 부르조아의 민중수탈과 민중 지배에 맞서 싸우는 제반 민중 운동과 투쟁을 모두 '악마'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처벌하기 위한 가증스런 술수에 다름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에 동조할 목적이나 그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활동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순순히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남한 민중의 비참한 처지를 타개하는 데 모든 정력과 생각이 집중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남한 민중의 현실을 개선하는 첩경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한 현실의 모순 구조를 해명하고 비판, 폭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노동자 계급을 필두로 한 민중의 조직성과 의식성을 재고하는 것에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인노련의 활동 양상입니다.

진실은 이것인데, 검사와 공안 당국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주입시킨 공포의 레드콤플



플렉스에 편승하여 과학적 사회주의에 기반한 민중 운동을 감옥에 가두고 노동자 계급 등 민중들의 현실을 악화시키고 착취를 강화시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사와 공안 당국, 나아가 자본과 국가 권력이 꾸미는 교활한 음모의 실상입니다. 우리 인노련은 북한 사회의 인식에서 누구보다도 주체적입니다. 인노련은 '이승만 정권 이후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현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제과정이 미제의 식민지 지배 음모의 관철 과정이었으며 남한의 국가 권력이 미제의 조정을 받는 식민지 괴뢰 정권이라는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 볼 때 옳지 못한 현실 분석이라고 단언합니다. 남한을 식민지 반봉건 사회(혹은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남한 정권의 모든 행위가 미제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사파의 현실 진단과는 전혀 단판으로, 우리는 6·25 전쟁 이래 남한이 독자적인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보고 있고 남한의 국가 권력이 국민 국가의 실체를 갖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식합니다.

우리는 주사파에 대해 객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 하는 주관주의적이고 관념론적인 철학과 인식 태도, 형이상학적 사고 방법에 사로잡힌 탓에 오류를 저지른다고 비판합니다. (『노동자의 길』 35호, 『민중 권력』 창간호의 글 참조)

즉, 인노련은 검사가 공소장 모두에 장황하게 인용한 북한의 주의 주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관주의적인 철학과 사고 방법에 싸여 객관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북한 당국이야말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보지 못한 경험의 한계와 개인 숭배 체제라는 사회 구조의 독특성, 그리고 남한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남한 현실에 대해 그릇 인식할 수도 있다고 용인할 수 있지만, 남한내에서 혁명 운동을 한다는 사람

우리는 남한 민중의 비참한 처지를 타개하는 데 모든 정력과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들이 북한 당국이 인식한 남한관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남한 사회를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보는 관점'을 유지하고 남한의 국민 국가(부르조아 또는 부르조아 일본파의 정권)를 미제의 괴뢰라고 규정하는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납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당면 전략·전술 수립에서 오류와 무능을 보여 심지어는 남한 혁명 운동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엄중한 비판을 제기합니다(87, 88년, 「정치 위기와 노동 운동」, p. 58).

주사파의  
주관주의적이고  
관념적인 사고 방법을  
비판합니다

이와 같이 인노련은 이적 단체가 아니라 오히려 남한 민중 운동의 조직적 발전과 민중 권리 의식의 고양에 큰 기여를 하였고 남한 사회의 모순 해결에 전력을 바치는 헌신적인 조직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노련을 이적 단체로 구속한 검사와 1심 재판부, 나아가 독점 자본과 과소 지배 권력의 의도적 왜곡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기는 커녕, 남한 혁명에서 북한의 지도성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노련의 강령에서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듯이 우리는 1945년 8·15 해방과 6·25 전쟁에 이르는 기간 자주적 민중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더욱 이상적인 사회로 발전해 가는 내적 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제국주의와 지주·자본가 계급의 저항으로 남한 민중은 계급 투쟁, 민족 해방 투쟁, 양대 진영간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남한 사회는 북한가 발전 양상을 달리하며 독자적인 사회 구성체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대사관에 입각하여 53년 이후 남한에서는 독자적으로 급속하게 자본주의가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전개된 현실이 남한 민중이 처한 생활 현장이며, 이것이 변혁 운동의 토대이자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53년 이후 변혁 운동의

인노련의 활동은  
철저하게  
남한 사회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남한 민중의 힘에  
의존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동력은 뺏속 깊숙히 남한 현실에서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남한 민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천 활동과 선전 작업, 그리고 선동의 핵심 내용은 바로 강령에 밝힌 바, 인노련의 사관과 현실 인식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상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는 검사와 1심 재판부의 혐의는 논리 부재와 무지, 그리고 비약적인 해석에 따른 판단 착오에 다름아닙니다. 아니, 이는 단순한 판단 착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노련의 올바르고 헌신적인 실천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려는 음모에서 의도적으로 진상을 왜곡하고, 노동자 계급과 혁명적 노동 운동을 분리시키려는 공작을 편 것입니다.

이제라도 본 피고인에게는 북한을 이롭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당연 무죄 선고되어야 합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아직도 과학적 사회주의에 대해 미심쩍어하고 마르크시즘을 옹호하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여전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다시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토지 독점, 마약 문제, 실업 문제, 물가, 노동자 계급의 정치 세력화 문제 등 현실적이고 긴박한 사안에 대해 인노련이 개입하고 지침을 제시하였는데, 이들 중 어느것 하나도 사태를 왜곡한 것이 없으며, 이들 기사들이 모두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현실의 제반 모순과 과제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노련의 활동은 철저하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먹고 자고 몸 담고 있는 남한 사회 현실에서 출발하여 남한 민중의 힘에 의존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남한의 민중 운동이 미국의 민중과 양심 세력을 고무시킬지도 모르고 소련의 민중, 동유럽의 민중, 일본의 민중.....을 고무, 격려할 수 있습니다나 찬가지로 북한의 민중들에게도

또한  
우리는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기는 커녕  
북한의  
지도성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무적인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필리핀 민중이 날강도 마르크스와 이멜다를 몰아낸 사실에 환호하고,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처형에 공감을 보내듯 남한 민중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면 이것이 전세계 민중들에게 더불어 축제의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에 북한이 기뻐한다고 6월 항쟁이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장님!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야 합니다. 인노련의 활동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여 무엇을 목적하였는가를 액면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글줄이나 읽고 힘깨나 쓰는 사람이 취할 최소한의 양심인 것입니다. 사물을 확대, 과장, 왜곡하여 보거나 사물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엉뚱한 칼을 썬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수감 채우겠다는 '불순한 목적'과 '관념'을 가지고 인노련의 활동을 편셋으로 꼬집어 내듯 꼬집어 내어 재단하고 분해, 조립하여 썬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에는 하루 속히 인노련의 목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사물을 거꾸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참고로 대학 교수 몇 분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마르크시즘에 대해 교수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정치학을 강의하고 있는 김세균 교수는 맑시즘에 대해, "자기 발전하는 생동적인 사회적 모순들을 노동 대중의 과학적 인식 능력과 능동적 역할을 통해 해결해 나가려는 본래의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자기 해방을 추구하는 노동 대중의 이념으로 계속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박영호 교수(한신대, 경제)는, "현대의 국가 사회가 마르크스 생존 당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자본주

의적 계급 구조와 착취 구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현대 국가 사회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유용성을 잃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변하였으며, 김홍명 교수(조선대, 정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는 현대 사회의 본질에 대해 아직도 살아 있는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고 하며 분석틀로서 마르크시즘이 유용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배 계급의 마음에 안 든다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이 아니라 천동설이 옳다고 강변하거나, 지배 계급을 비판한다고 책을 몽땅 불태워 버리는 형태는 중세적 세계에서 그치고 이젠 그만두어야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학 강단에서 마르크시즘의 의의와 유용성을 강의하는 객관 현실에서, 인노련의 활동을 마르크시즘에 기반한 활동이라는 죄목으로 단죄하는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판결이 더이상 앵무새마냥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4.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법이 곧 정의라는 말은 지배 계급의 관점에 설 때만 옳은 말입니다. 법은 그 사회의 계급 현실과 지배 관계를 철두 철미하게 반영합니다. 지배 권력은 법을 빙지하여 자신의 권익을 옹호·확대하고, 그에 도전하고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서슴없이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노동 악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등 악법과 살인·고문·강간을 일삼아 온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 대공분실 등 파쇼 폭압 기구들은 이러한 법과 제도의 계급적 성격을 가장 잘 대변해 줍니다. 특히 우리 인노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은 지배 계급을 유지하기 위해 민중 운동을 어떻게 억누르는가, 민중 운동의 발전을 지배 계급이 어떻게 봉쇄하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아야 합니다. 사물을 거꾸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는 착취 강화를 위한 민중 억압의 역사입니다.

지배 계급의 마음에 안 든다고 천동설을 강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국가 보안법의 역사는 자본과 지배 권력의 민중 착취와 민중 지배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해 민중에 대한 사형 선고와 체포, 투옥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국가 보안법의 조상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의 치안 유지법입니다. 국가 보안법의 직계 할아버지인 치안 유지법은 일제가 식민지 초과 이윤을 착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선의 애국자들을 굴비 엮듯이 엮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특히 치안 유지법은 1920년 '회사령' 철폐를 기점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동시에 노동자 계급 운동이 태동하고, 일제의 식민지 농업 수탈에 맞서 농민들이 저항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그에 기반한 노동 계급 운동이 사회주의 사상, 운동으로 전화·발전하게 되자 이에 위협을 느껴 만든 것으로, 한마디로 조선 민중들의 민족 해방 투쟁과 계급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악법입니다. 낡은 부르조아 민족주의로는 사회적 해방은 커녕 조선 독립도 불가능함을 깨달은 노동 계급은 "민족간의 차별과 억압을 없애고 계급간의 차별과 억압 또한 없애야 한다"는 기치 아래 생활 현장 곳곳에서 일제의 식민지 착취 정책에 직접적으로 맞서 투쟁하였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민족 독립, 사회주의 운동에 대해 대응 방침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1925년 치안 유지법을 만들고 28년에 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신 치안 유지법'으로 개정하여 민족 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안 유지법은 '국체 또는 정체의 변혁 혹은 사유 재산 제도의 부인을 목적하는 조직 및 활동에 대해 처벌할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 일제가 이야기하는 국체와 정체란 일본 독점 자본의 정치적, 법적 껍데기인 천황제와 식민지 통치 기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치안 유지법은 그 목적에서 보여지듯 사회주의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을 처벌, 탄압하기 위한 법적

국가 보안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치안 유지법을 이어받은 파쇼 체제 유지 장치

장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일제는 1936년 12월,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을 공포하여 치안 유지법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치안 유지법과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의 기본 정신은 이승만 독재 정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파쇼 권력에게 직계로 면면히 계승됩니다.

45년 8·15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는 친일 세력을 처단하고 자주적인 민중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친미 자본가 정권은 미제의 비호와 지원 아래 친일 세력인 지주와 자본가 계급 공동으로 지배 권력을 형성합니다. 이승만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운동 세력을 초토화하기 위해, 이승만 정권은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이어받아 1948년 3월 3일, 내란 행위 처벌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마침내 동년 동월 38일 국가 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악법을 제정하여 일제 유산을 청산하기는 커녕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1958년에 보안법을 한층 파쇼화하는 개정을 기도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반대 농성하자 무장 경위 3백 명을 동원하여 야당 의원들을 끌어낸 뒤 자유당 단독으로 '12·24 보안법 개정'을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이른바 24 보안법 파동입니다.

국가 보안법은 제정된 이래 일제의 반정부·반체제 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또한 민중 의식을 마비시키는 수단으로 한몫(?)을 톡톡히 하였고 이승만 지배 질서를 수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 국가 보안법은 4월 혁명 이후 폐지되었으나 혁명의 발전을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부르조아들에 의해 국가 보안법이 1960년 6월 10일에 새로이 제정되어 여전히 그 맥을 유지합니다.

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에 의해 반동 쿠데타에 일어나 4·19 혁명의 민주주의 개혁 요구는 된서리를 맞게 되고, 설상

파쇼 세력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민들의 냉전 의식을 자극하고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민중 운동과 국민들을 분리시키려고 광분해 왔습니다

가상으로 박정희는 반공법을 제정하여 국가 보안법과 함께 파쇼 체제를 유지하는 법적 장치를 완비합니다. 이에 더하여 72년부터는 장기 집권 태세로 돌입하여 긴급 조치 시대를 열고, 모든 비판을 금압하고 반공 이데올로기 세뇌를 한층 강화하여 남한 사회는 이후 전시 비상 체제로 돌입, 병영 사회가 되고 맙니다.

시인들은 이 시대를 일컬어 겨울 공화국, 동토의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도 성장하는 민주화 운동과 지배 권력 내부의 암투로 몰락하고 잠시 88년 서울의 봄을 맞이하였으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박준병 등에 의해 12·12, 5·17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또 다시 군사 파쇼 세력에 의해 민주화 흐름이 차단당하고 맙니다. 이들 군사 파쇼 세력은 총칼로 국회를 해산하고 불법적으로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만들어 남한 지배 권력을 장악한 다음 파쇼적 지배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 바, 쿠데타의 사생아인 '국가 보위 입법 회의'라는 초헌법 기관을 만들어 국가 보안법, 노동 관계법, 집회 시위법, 언론 기본법, 대통령 선거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5 공화국의 민중 지배 구조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전두환 파쇼

사실 우리는 지배 계급이 이야기하는 "국가"가 민중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정권은 성장하는 민중 운동에 대해 틈만 있으면 국가 보안법이라는 칼날을 휘둘렀으며 파쇼 세력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국민들의 냉전 의식을 자극하여 국가 보안법을 적용, 민중 운동과 국민들을 분리시키려고 광분하였습니다.

노태우 정권도 다를 바 없어서 특유의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사람 잡는 짓거리로 노동, 재야, 학생, 종교, 언론, 지식인 등 민주화와 민중 해방을 위해 정성을 다바쳐 투쟁하는 양심 세력을 국가 보안법이라는 울가미로 구속, 처벌하는 '국가 보안법 코뚜레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국체·정체 수호'라는 미명으로 합리화하며 치안 유지

법을 들이댔듯이, 역대 파쇼 집단은 국가 보안법이라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국가의 안전 수호'라고 뇌까리며 미친 듯이 탄압의 망나니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안법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지배 권력의 선전에 얼핏 주눅듭니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하고 차분히 들여다보면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국가 보안법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보안법이란 지배 권력의 계급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배 권력의 모순을 폭로하고 저항하는 민중 운동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을 살해, 고문, 투옥, 탄압하는 법적 장치일 뿐입니다. 단순히 '국가 보안법 혐의자'의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고문으로 살해된 박종철 열사의 사건은 지배 계급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웅변한다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배 계급이 이야기하는 '국가'가 민중들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독점 재벌과 지배 권력의 부동산 투기 조장으로 집값, 전세값이 천정 부지로 폭등한 뒤, 전국 각지에서 단란하게 살던 서민들이 자살하는 현실, 엇그제 5월 25일에는, 부산시 염산3동 1875번지에 세들어 살던 60세 할아버지가 인상된 전세금 2백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비관, 3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신문 기사는 우리를 절규하게 하는 데, 신문의 다른 귀퉁이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아파트에 사는 9살, 12살 먹은 어린 남매가 제주도에 무려 62만 9천 77평을 매입했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이 엄청난 대비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 땅 민중들은 현 사회 질서가 엄청난 계급 사회임을 현실 속에서 피부로 자각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 중공업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육해공 입체 작전으로 진압하는 자본가가 지배 권력의 노동자 토벌 작전을 보며 국가 권력의 실체를 몸으로 느낍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국가 안전 수호라는 말이 노동 착취 조건을 순탄하게 만드는 공작임을 확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이 우리 노동자들을 위시한 민중들은 생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지배 권력이 떠들어대는 '국가 안전 수호'라는 말이 지배 권력이 민중의 노동을 순탄하게 착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공작에 다름아님을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국가란, 헤겔이 주장하는 것처럼 '윤리적 이념이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이성이 형상화되고 현실화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엥겔스가 설파한 대로 국가란 단지 계급들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회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의 특징은 하나의 무장한 물리력으로서 그 자신을 조직화한 주민들과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공권력'의 성립에 있다. …… 이러한 공권력은 모든 국가에 존재하며, 이는 단순히 무장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씨족 사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부속 기구, 감옥, 그리고 억압 장치를 갖추고 있다. …… 국가는 계급간의 대립을 억제할 필요로부터 또한 동시에 이 계급들이 충돌 그 자체로부터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가장 유력한 계급의 국가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어 정치적으로도 지배하는 계급이며, 그리하여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이리하여 고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예 소유자들이 노예를 억압하기 위한 국가였으며, 그리고 또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국가다. …… (엥겔스, 『가족, 사유 재산 및 국가의 기원』)

국가보안법이 노리는 것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는 거창한 포장을 두르고 독점 자본과 파쇼 지배 권력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없이 누리겠다는 고등 술수에 다름 아닙니다. 자본가 또는 자본가 일파의 계급 지배 도구인 현 파쇼 권력은 국가 권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사명을 자각케 하는 민중 운동, 특히 과학적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금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이런 자본가 계급의 의도를 유감 없이(?) 대변해 주는(자본가들에게는) 믿음직한 법적 도구입니다. 이것이 국가 보안법의 계급적 본질입니다.

국가 보안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실질적 주인인 민중이 아닙니다. 국가 보안법은, 남한 사회가 안고 있는 독점 대자본과 민중간의 모순, 파쇼 지배 권력과 민중간의 모순을 타개하고 민중이 주인되고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상식과 건전한 사고가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 운동을 탄압하고 억누르는 지배 권력의 폭력 도구입니다. 국가 보안법이 있는 한, 일천만 노동자 계급을 위시한 농민, 도시 빈민, 소생산자, 근로 인텔리 등 민중들은 자신의 사상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자 계급의 조직을 결성하고 노동자의 사상을 흡수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 국가 보안법이라는 포승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실상은 지배 권력이 떠드는 자유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구와 기만에 찬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형식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다당제의 원리 등이 독점 자본과 지배 권력의 민중 통제 정책 앞에서 사실상 유명 무실한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거듭 주장합니다.

민중 운동 탄압하고 민중의 정치적 진출 가로막는 국가 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하며, 노동자에게 조직 건설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빠짐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인노련의 활동은 국가 보안법에 의해 심판받거나 재단되는



인노련의 활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활동은 오로지 노동자 계급과 역사에 국가 보안법에 의해 심판받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심판받거나 재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오로지 노동자 계급과 역사에 의해 심판받고 평가받을 것입니다

### 5. “민중의 소리” 방송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 일간 신문을 읽으며 분개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를 가둔 감옥의 담이 아무리 높더라도 우리들의 가열찬 투쟁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굵은 철창과 차디찬 콘크리트 담벽으로 겹겹이 갇혀 있지만, 조금도 굴하지 않고 매시기, 매시안마다 적극적으로 투쟁하며 재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선동하고 정치 폭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 무죄가 선고되어 석방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장에서 불굴의 의지로 최선의 삶을 가꾸어갈 것입니다.\*

\* 다음 세 편의 글은 서울 구치소 정치범들이 재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중의 소리' 방송을 할 때, 본인이 행한 정치 폭로의 일부입니다.

우리 정치범들은 일 주일에 두세 차례씩 그 주간의 주요 사건을 소재로 서로 돌아가며 한 주제씩 말아서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독방에 갇힌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화장실(뽕끼통)에 서서 창문을 열고, 두 손으로 철창을 잡고 밖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서 민중의 소리 방송을 진행합니다. 정기적인 민중의 소리 방송의 결과, 일반 재소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이루어지고 정치범의 활동에 대한 지지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 ◇다수의 빈곤과 소수의 과잉◇(90. 3월말)

소수의 과잉과 다수의 빈곤 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에 1단 기사나 2단 기사로 전세값 폭등을 비판해서 자살하는 기사가 실리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호화 사치품의 수입 경쟁과 과소비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인상된 월세 보증금 50만 원을 마련할 것이 없어 남의 집 담을 넘는 10대 공원의 이야기나, 폭등한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연탄 화덕을 끌어안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20대 여공원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이 첨예한 계급 사회인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도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3월 28일자 「동아 일보」 한 권에도 또 다시 “월세 20대 주부 자살”이라는 제하에 ‘방도 없고 돈도 없어’ 자살한다는 유서를 남긴 채 벽 옷걸이에 스타킹으로 목을 매 숨진 최순희 씨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숨진 최씨의 남편에 의하면 운전 기사인 자신의 봉급으로는 폭등된 월세 보증금을 마련할 길이 없는 실정인데 최근 자신이 월세 3만원으로 세들어 살던 셋방이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되면서 당국에서 수차 철거해 달라고 요구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돈이 없는 처지를 고민해 왔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20대 가정 주부는 월세 보증금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을 선택하여 가난한 서민의 현실을 죽음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토지 독점과 정부 정책의 파산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땅값과 그에 뒤따른 집값 인상·천정 부지로 치솟은 전세값 인상으로 소리 없이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의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 소수의 독점 재벌은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투기만으로도 최소한 22% 이상 고정 자산을 늘렸다고 합니

정부 정책의 파산으로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줌밖에 안되는 다. 30대 재벌의 보유 땅값이 장부 가격만으로도 13조 원을 넘으니 재벌 그룹 한 개당 평균 수백, 수천억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월세 보증금 몇십만 원, 전세 보증금 몇백만 원이 없어서 남의 집 담을 넘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이 땅 서민들은 30대 재벌이 재벌 1개 그룹당 수백, 수천억대의 땅을 사재기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에 분노를 넘어 까무라칠 지경입니다.



이처럼 소수의 독점 재벌과 토지 자본가가 사유 토지의 대부분을 독점 소유하여 부동산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고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32% 이상 땅값이 인상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처럼 모두들 그 진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토지의 독점적 소유는 땅값 상승을 낳고 연쇄 작용으로 집값 상승,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이치입니다.

국토 개발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세값이 1년 1개월만에 26% 폭등하였고 주택 가격도 작년 2월의 가격 차이를 비교할 때 거의 29%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 등 불로 소득으로 한 줌밖에 안되는 사람들이 부를 집중해 간 결과, 다수 민중들은 절망의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대신, 소수의 가진 자들은 호화 방탕한 생활로 치달고 있습니다. 부르조아 언론들마저 체제 위기를 부채질한다는 우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며 보도하고 있듯이 호화 사치성 물품의 수입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루네오 가구, 동서 가구, 영본 침대, 에이스 침대 등 국내 가구 생산업체들이 앞다투어 가구 생산보다 호화 외제 가구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수십, 수백만 원이 없어서 절망하는데, 소수의 가진 자들은 의자 하나, 응접 세트 1세트를 위해 수백, 수천만 원을 선뜻 투자하는 세태입니다. 대다수 서민의 절망과 소수 가진 자의 환희가 교차하는 서글픈 대조입니다.

1백95만 8천 원,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표가 붙어있는 호화판

가구들이 즐비하게 수입되고 있습니다. 인천 세관에 따르면, 1/4분기가 채 지나지 않은 3월 28일 현재, 호화 사치성 물품 수입이 작년도(89년) 총수입액 1천3백86만 9천 달러의 75%에 달하는 1천33만 1천4백1 달러에 이르고 재작년 88년도와 비교하면 금년 1/4분기 수입액이 88년 총수입액보다 무려 여덟 배나 신장되었습니다. 호화 사치성 수입 품목은 승용차와 침대, 식탁 세트, 골프채, 디지털 피아노, 화장대 등이 주종으로 기아 산업 기아 서비스, 두산 산업, 쌍용, 보루네오 가구 등 대기업체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이들 호화 방탕한 사치성 수입 품목의 면면을 보건대, 그것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노동하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동력 착취와 부동산 투기 등 불로 소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소수 자본가와 지배 권력이 호화 사치품의 구매자임을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한 국내의 유수한 기업체들이 앞장서서 서민 생활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호화 외제 물품 수입에 앞장서고 생산에는 소홀히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본가들이 호들갑을 떠는 국제 무역 수지 악화와 경제 침체의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자본가와 지배 권력이 목소리 높이는 대로 날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면,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외국 업체들과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자사 제품과 국내 시장을 보호해야 할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요 불급한 호화 외제 물품을 수입하는 현실이나, 우리가 한 줌 지배 권력과 자본가에게 그 어떤 도덕적 양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소수 독점 자본과 지배 권력은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같이 경제의 뿌리를 갈아먹고 뒤흔드는 자들입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민중이 도탄에 빠지든지



우리가 한 줌 지배 권력과 자본가에게 그 어떤 도덕적 양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은 말든지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민중들의 절망과 죽음  
 민중의 피를 이 배어 있는 땅값 32% 상승으로 단지 막대한 부를 챙기는  
 빨아 먹고 것에 만족하고, 호화 외제 물품을 수입, 판매하고, 구입하여  
 확대해 가지 않으면 부를 과시하는 것에 한껏 만족하는 자들이 소수 독점 재벌의  
 한시도 존재할 수 없는 본질이며 실상입니다. 전노협을 탄압하고 최저 생계비의 85%에  
 흡혈귀입니다 불과한 전노협의 임금 인상 요구 23.3%가 너무 많다고 별떼같  
 이 일어나서 탄압하는 자본가들의 본질도 노동력 착취와 부의 축적이라는 자본의 생리상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본가의 양심이나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는 선님들의 기대가 얼마나 어설프고 순진한 생각에 다름아닌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본은 민중의 피를 빨아먹고 확대해 가지 않으면 한시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흡혈귀입니다. 노조 업무 조사, 112 전화 신고로 즉각 출동하여 노동자를 잡아가는 공권력, 노조 전임자는 휴직 상태이고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본가 정부의 판정,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부동산 투기에 흥분하고 호화 외제품을 수입하고 소비하는 자본의 실상과 똑같은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투기도 마다 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와 민중의 절망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자본의 움직일 수 없는 본질입니다.

이런 피도 눈물도 심장도 없는 자본가에게 인간적인 호소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로지 단결된 노동자와 민중의 투쟁만이 자본 흡혈귀를 무덤에 영원히 잠재우게 하는 특효약입니다.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근로 시간을 주 44시간에 잔업 12시간 초과 금지를 못받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개정을 건의하고 유급 휴일이 1년에 1백21일에서 1백34일로 늘어나 근로 분위기 조성이 안된다고 휴일 수를 줄여 달라고 요청하자 박필수 신임 상공부 장관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제한하는 노동법이 있을 수 있느냐”며 노동법 개정 추진을 호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리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냉철한 자본가 권력의 장담입니다. 모름지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은 당연하게도 노동 시간의 연장과 유급 휴일 감축, 그리고 생리 휴가 몰수 등으로 모권을 파괴하고 노동 환경을 악화함으로써 노동 착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흡혈귀 자본에게 우리 민중들이 무엇을 요청하며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라곤 불끈 권 두 주먹과 민중들의 단결된 조직과 투쟁뿐입니다. 그렇지만 일천만 노동자와 그 동반자인 팔백만 농민, 사백만 도시 빈민을 핵심으로 한 민중들의 투쟁은, 죽음의 절망을 딛고 일어선 투쟁이며 생존의 과명적 그늘을 걷어내고 단결한 투쟁이며, ‘무노동 유(有) 노동 착취’의 자본가적 착취가 아니라 노동함으로써 가치를 생산하고 사회를 건설하는 진정한 사회 발전의 동력이기 때문에 한 줌 독점 자본과 지배 권력을 녹여내고 봄날 새싹 돋아나듯이 그렇게 성큼 민중 해방, 노동 해방의 새 날을 건설할 것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는 자본가의 가소로운 선전에 대해, 노동하지 않는 자본가의 막대한 소득을 원천 징수하고 전면 몰수하는 투쟁으로써 당당하게 맞섭니다.

자본가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노동법”을 타하고 있으므로 골프장과 해외 여행을 들락날락하는 자본가들을 줄줄이 묶어다가 그들 소원대로 맘껏 일하도록 프레스, 선반 기계 앞에 붙들어 맵시다. 그리고 호화 외제 물품 구입에 열올리는 자본가 마누라들을 모셔다가 그들 소원대로 생리 휴가도 없이 꼬박 미성을 돌려보고 납땀을 하도록 공장에 취직시킵시다.

동지들! 노동 착취에 열 올리고 민중을 기만하며 과소비, 호화 외제 물품 수입에 눈이 벌건 자본가들의 민중 지배에 맞서 굳건히 투쟁합시다.



우리가 믿을 것이라곤 불끈 권 두 주먹과 민중들의 단결된 조직과 투쟁뿐입니다

◇물가 폭등에 대하여◇

서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한다면 이 땅 민중들은 하나로 뭉쳐서 네놈들 독점 재벌과 민자당 파쇼 정권, 네놈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철철 흐르도록 해주겠다. (1990. 4월 중순, 민중의 소리 방송)

물가가 폭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기획원에 따르면 4월 15일 현재 도매 물가는 지난 연말 대비 1.8%,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무려 4.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승폭은 당초 정부가 밝힌 올해 물가 억제 목표인 소비자 물가 5~7%를 불과 3개월여만에 거의 육박한 것으로 9년만에 처음 있는 물가 폭등 현상입니다. 현 민자당 1.22 파쇼 대야합 정권 출범 전후로 재벌을 위시한 자본가 편향 경제 정책이 득세하고, 민중의 경제적 현실 개선에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민자당 정권의 무능과 반민중적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지난 4.4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이 발표될 때부터 우려를 갖고 걱정하며 지켜왔습니다. 4.4 경제 종합 대책으로 서민의 주름살은 날로 늘어만 가고 주름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재벌, 자본가들은 회색 만면해서 환영하였던 것이 4.4 경제 종합 대책의 실상입니다.

경기 침체와 기업의 투자 위축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떠맡기는 4.4 경제 종합 대책

한참 호들갑을 떨며 경기 침체와 기업의 투자 위축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노동자에게는 임금 인상을 자제하라, 생산성 임금제를 수용하라 하고 명령하는 것이 4.4 경제 종합 대책의 한쪽 날개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투자 위축과 경기 침체가, 세계에서 최고 열심

히 노동하는 노동자 때문이 아니라 재벌과 자본가들이 부동산 투기와 증권 투기에 게걸스럽게 열 올리고 있고 기업이 경영 합리화나 기술 혁신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노동 악법을 다시 파쇼 악법으로 개악하여 노동 착취를 강화하려는 씨러배아들놈 같은 발상이나 하는 점에 경기 침체와 기업 투자 위축의 원인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벌과 자본가의 "사기 진작"에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자본가 편향 정책에 한없이 분노합니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데 재벌, 자본가들은 민자당 파쇼 야합 집단을 부추겨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 투쟁을 억누르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것이 4.4 경제 종합 대책의 다른쪽 날개입니다. 일부 부유 계층이 공포심을 갖고 저지 활동을 벌였던 금융 실명제를 사실상 전면백지화하고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성장으로 설정하여 분배 문제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재벌과 자본가의 '사기 진작'에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의 노골적인 재벌과 자본가 편향 정책을 보고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얼마전 임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4.4 경제 종합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하자, 이승윤 경제팀은 미꾸라지처럼 질문을 비껴 빠져나가기도 하고 도도하게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으며 또한 낮잡 두껍게 잘못된 경제 정책을 무슨 대단한 발상인 양 강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승윤 경제팀은 "경제 정책도 정의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재벌들의 투자 의무부터 살려야 한다. 모두가 어렵다. 그렇지만 먼저 재벌부터 살려야 한다."며 허스레를 떨고 오만 방자한 태도로 민중의 생활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민자당에 정치 자금을 넘죽넘죽 갖다 바치는 재벌 지원 정책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4.4 경제 종합 대책과 민자당의 경제



한 가정 주부의 소박한 판단과 우려는 불행하게도 괜한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보는 이 땅 서민들의 눈초리는 따갑기 그지없습니다. 한 평범한 가정 주부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 종합 대책 평가를 들어 봅시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가정 주부 박귀주 씨는 “전세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의 주택난이 심각한 지경에 있는데도 이번 4.4 경제 대책 발표 내용에는 이 문제를 별로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 비판하며 잇달아 “대기업에 돈을 마구 풀면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물가가 더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물가 상승을 미리부터 불안해 하였습니다.(한겨레 신문 4.5). 그렇지만 한 가정 주부의 소박한 판단과 우려는 불행하게도 괜한 걱정거리가 아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민자당 정권이 재벌 지원 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그 순간에도 물가는 뛰어 올랐고 김영삼이와 박철언이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다’하며 어쭙잖게 티격태격하는 동안에도 물가는 뛰어올라, 9년만에 물가 사상 최고 폭등이라는 서민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인해 민중들이 현실에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는지 다시 한 주부의 이야기를 들어 보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김현숙 주부의 장바구니 물가 이야기입니다(한겨레 신문 4.22).

“식품이나 전세값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 요즘 시장에 가 보면 너무도 뛰어오른 물가에 한동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고추 1개에 2백 원, 파 한 단에 1천 원, 열무 한 단에 8백 원이나 한다.

그동안 2천만 원에 살고 있던 전세값을 무려 50%나 올려달라는 주인의 성화에 견디다 못해 발이 부르뜨도록 돌아다니며 새 전셋집으로 이사온 지가 엇그제인데 앞으로의 생활이 아득하기만 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20평형 아파트 마련은 고사하고 어떻



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네 같은 서민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알뜰하게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은 정권의 진퇴를 걸고서 강력한 물가, 전세값 인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한겨레 독자 투고)

이렇게 한남 2동 주부는 물가 폭등으로 피부 깊숙히 불안을 느끼며 분노하고 정부에 제발 민중 생각하는 경제 정책을 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고추 1개에 2백 원하고 파 한 단에 2천 원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 현실입니다.

농민들이 농정 파탄으로 무를 갈아엎고 젊은이란 젊은이는 모두 도시로 떠나 버려 일손 부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도시 빈민들의 주거지가 산산히 파괴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 투쟁이 감옥에 갇히고, 악법도 부족해서 노동 악법을 민자당식으로 한층 파쇼화하여 노동법이 아예 무한정 자본가에 의한 노동 착취를 보장해 주는 법으로 만드는 것이 또한 우리 노동자가 당면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리고 9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는 물가 4.7% 폭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민중 생활이 아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것이 민중에 대한 6공 민자당 정권의 경제 정책인 것입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자금과 기업 자금 지원으로 팽창된 통화량이 물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집값, 공공 요금, 농축산물 및 음식물값을 포함 개인 서비스 요금 등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상태이기에 최근의 물가 상승을 바라보는 민중들의 시선은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물가 안전 대책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 5% 인하, 전화 기본 요금 및 시외 통화 요금 인하, 도시 가스 요금 6% 인하 등을 발표하였지만 이것은 물가 폭등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 물가 지수를 0.086% 낮추는 효과에 불과한 것으로 코끼리 비스킷이요 새발의 피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물가

한 주부는 제발 민중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고 정부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투기 재벌에게는  
관대하기만 한  
이 자본가의 천국이  
갈아엮어지지 않는 한  
서민들의 깊게 파인  
주름살은 날로  
늘어만 갈  
것입니다

불안의 더 큰 요인인 부동산 투기 급증에 대해서는 업포만 놓고 제대로 손도 못 대는 것을 볼 때 민자당 정권이 서민의 한숨 소리를 듣거나 듣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30대 재벌이 무려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새로 매입하였고 이와 같은 재벌, 자본가들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런 투기 열풍으로 전국의 땅값, 집값이 들썩하였다는 것을 우리 민중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벌과 자본가들은 기회만 있으면 기업 운영 자금이 달린다 어쩐다 하며 죽는 시늉을 하고 자금 지원을 호소하였는데, 이 말이 실상 부동산 투기 자금이 부족하다는 헛소리였음을 재벌과 자본가들의 땅투기 실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단지 30대 재벌의 부동산 가액이 장부 가액만으로도 무려 13조 1천3백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한, 증시 부양책이나 기업 운영 자금 지원을 백날 해 보았댔자 밀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이런 재벌과 자본가의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지 않는 한 집값, 전세값 폭등과 물가 인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농촌을 파탄시키고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민중의 경제 현실을 갈수록 숨막히게 하는 민자당 정권이, 투기 재벌에게는 관대하기만 한 이 자본가의 천국이 갈아엮어지지 않는 한 서민의 굵은 손마디와 굵은 허리는 제대로 퍼질 수 없고 깊게 패인 서민의 주름살은 날로 늘어만 갈 것입니다.

###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영웅적 투쟁 만세◇

(90. 5. 1)

민자당 파쇼 권력의 마각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독점 재벌의 이익을 수호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폭력

적으로 진압한 현대 중공업 사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독점 재벌 정주영은 작년 3월에도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투쟁을 폭력적 공권력을 동원하여 일거에 진압하더니, 민자당 파쇼 권력이 수립된 이후로는 노조와의 협상도 도도한 자세로 거부하고 파업 시작 나흘만에 무자비하게 현대 중공업 동지들을 노동자의 삶터에서 거리로 내몰고 현대 중공업을 점령한 것입니다.

바로 엇그제 4월 28일 새벽, 독점 재벌 정주영, 정세영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자마자 노태우 파쇼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투 경찰 1만여 명을 투입하여 육해공 입체 작전으로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듯, 독점 재벌과 민자당 파쇼 권력의 폭력 진압 부대는 최루탄 오천여 발을 쏘며 울산 동구 지역을 최루탄의 매캐한 연기로 뒤덮고는 18개 중대는 정문으로 34개 중대 5천5백여 명은 4개 출입문으로 또 7백여 명은 해양 경찰대 소속 1천 톤급 경비정 두 척을 타고 해상으로 침투하였습니다.

한편 12대의 다연발차와 지원 엄호조의 최루탄 발사를 신호로 12개 중대 1천5백여 명의 '특공 체포조'가 밀려들어가 노동자 6백여 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이 완강하자 김성배 울산 경찰서장은 '너희들은 포위되었다'고 협박 방송을 했습니다. 또 헬기 3대를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기도 했으며 무슨 적군을 진압하듯이 헬기를 통해 선무 방송을 하고 뼈라를 살포하며 가증스럽게 노동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포만 작전, 현대 90 작전"으로 명명된 독점 재벌과 파쇼 권력의 현대 중공업 점령 과정은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독점 재벌과 천만 노동자의 일대 전쟁의 서곡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미포만 작전"은  
독점 재벌과  
일천만 노동자의  
일대 전쟁의  
서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28 현대 중공업 파업 투쟁 강제 해산 사건은 자본가와 노동자간에 끊임없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적대적 모순 투쟁의 발현이며, 독점 재벌과 노동자 계급이 간단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 평화화, 노사 협조다 하며 나팔을 불어대지만, 독점 재벌과 파쇼 민자당의 본모습은 평화와 협조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저 간악한 자들의 본모습은 4.28 현대 만행에서도 확인하듯 육해공 입체 작전을 동원하여 군사 작전으로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 동지들이 자본가 계급의 “미포만 작전”에 맞서서 “노조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경찰 투입을 저지하자!!”, “노조 사수!”를 외치고 “동지가”를 부르며 결연히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4월 30일 현재, 6백 56명의 동지들이 파쇼 경찰에게 끌려갔고 그 중 14명의 동지가 구속되고 64명은 불구속 입건, 124명은 즉심에 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노동자들의 삶터를 저 더러운 군홧발로 욕되게 유린당하고 1만여 명의 파쇼 경찰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독점 재벌과 파쇼 권력은 파업 부대를 성공적으로 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점 재벌과 파쇼 권력은 무사히 노동자 파업 부대를 진압하고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쫓겨난 사업장에는 육설만 난무할 뿐 망치소리, 기계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적막한 전쟁터의 고요만이 깔려 있을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없는 공장은 한낱 파쇼 경찰의 야영장일 뿐 생산 시설은 단 하나도 가동될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할 때만이 기계가 숨을 쉬고 선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방에 고요만이 깔려 있고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나 거리에서 외로이 투쟁하고 있는 지금, 파쇼 권력은 이제 현대 중공업 사태는 끝났다고 호언할 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노동자 부대는 그렇게 어리석지도 않으며

무력하지도 않습니다. 작년 3월의 패배를 딛고 일어난 현대 중공업 동지들은 82m 높이의 콜리엇 크레인에 투쟁 지도부를 꾸리고 울산 곳곳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중공업은 진압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해 파쇼 경찰이 농락당하고 유린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영웅적 투쟁은 온 들판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한 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 노조 운동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를 말살하려는 자본가의 탄압을 목도한 천만 노동자들은 분노에 치를 떨며 기계를 끄고 망치를 들고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투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88년말 이후 경제 위기에 대한 노동자 책임론을 내세워 이념 공세를 취해온 독점 재벌과 지배 권력이 작년말부터는 노조 간부 구속, 노조 업무 조사, 노동 약법을 파쇼 약법으로 재개악하려는 움직임, 무노동 무임금 등 노동 운동을 뿌리뽑고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한층 강화함에 따라 분노를 씹어 삼키고 투쟁 의지를 삭이고 녹여 심장 가득 채워 온, 천만 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인 전노협을 와해시키려는 책동임을 대변에 알아채고 있는 천만 노동자들은 경향 각지에서 지원 투쟁, 결사 항전을 속속들이 결의하고 있습니다.

마창 노련·서노협 동지들도 파업 투쟁에 동참하고 나섰으며 이제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투쟁은 전국을 들끓게 하며 자본가의 노동 운동 와해 책동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대협 동지들이 오늘은 종로에서, 어제는 부산에서, 그리고 대구에서,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영웅적 투쟁 만세, 민중 운동 탄압하는 민자당 타도, 전노협 사수를 외치며 지원 투쟁을 힘차게 벌이고 있고, 또한 국민 연합, 민연추, 전민련에서도 현중 동지들과 전노협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옹호하고 언론 자유 쟁취를 위해 싸우는 KBS 동지들의 투쟁을 아울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은 진압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의해 파쇼 경찰이 농락당하고 유린된 것에 불과합니다



독점 재벌의 지시를 받고 출동하여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정당한 투쟁을 진압하고 유린한 민자당 파쇼 권력의 폭력적 노동 지배 정책에 전민중이 분노하고 결사 항전, 필사즉생의 자세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영웅적 투쟁 만세!!!!

메이데이 노동 해방 투쟁 만세!!!

(이글은 가까이 있는 동지들과 메이데이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낭독한 것으로 현대 중공업 파업 투쟁 진압 사건에 대한 규탄, 폭로의 글입니다.)

그 이후 전개된 사태는 모두들 잘 알다시피, 골리앗 크레인에서 장기 투쟁을 전개하던 현대 중공업 동지들이 일교차 20°가 넘는 열악한 투쟁 조건에서 식수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강고하게 싸우다가, 5월 6일부터는 라면 14박스, 쌀 20kg들이 2부대, 물통 등 모든 음식을 밑으로 던지고 단식 농성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농성자들은 탈진하여 쓰러지는 동지들이 속출하자 불상사를 막기 위해 부득이 농성을 풀고 자진 해산하였습니다.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영웅적 투쟁에 힘입어 자본과 국가 권력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연대 파업 투쟁이 전노협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부천, 마산, 창원,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1백70여 개 노조 30만 명이 연대 파업 투쟁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 창원 노련에 대한 자본과 국가 권력의 탄압에 항거하여, (주)통일 노조 교육부 차장인 이영일(28) 동지가 분신 자살하였습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고 절규하며 젊음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스러져 갔습니다. 이영일 동지는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군부 독재 타도”, “노조 탄압 중지”, “회사는 각성하라”고

외치며 마지막까지 노동 탄압에 대한 분노와 처절한 항거를 토해내었다 합니다. 동지의 시신은 저 더러운 파쇼 경찰에게 탈취당하였고, ‘전국 민주 노동자장’은 최루탄과 파쇼 경찰의 몽둥이로 차단되었으며 동지의 몸은 강제 화장되어 금강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중공업과 마창 노련 동지들, 연대 파업 투쟁에 참가하여 자본과 파쇼 권력의 노동 운동 탄압에 분연히 항거하여 투쟁의 결의를 드높였던 동지들은 오늘도 죽음의 고역 같은 착취 노동의 그늘에서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쟁의 한 고비가 지나갔지만, 현대 중공업 동지들의 영웅적 투쟁과 동조 연대 파업 투쟁은 일천만 노동자의 가슴에 강한 불씨를 당겨 놓고 말았습니다. 적나라한 파업 투쟁을 통해 일천만 노동 계급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자각하였고, 어느 세력이 누구의 편인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파업 투쟁’이라는 말은 노동 계급에게 승리를 향한 투쟁의 무기로 가슴 벅차게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독점 재벌과 독재 권력은 노동부, 감옥, 전투 경찰, 최루탄, 몽둥이로 노동자들의 대열을 해산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파쇼 권력의 승리가 곧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일천만 노동 계급은 똑똑히 가르쳐줄 것입니다. ‘파업 투쟁’으로 세례된 일천만 노동 계급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사방으로 물살을 퍼져 나가게 하듯이 노동자 계급의 무기를 움켜쥐고 투쟁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왕성한 계급 투쟁이야말로 민중 민주 사회를 여는 건강한 힘입니다.

노동자 계급이 착취의 현실을 타파하고 승리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이만 마칩니다.

그 동지들은 오늘도 죽음의 고역 같은 착취 노동의 그늘에서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왕성한 계급 투쟁이야말로 민중 민주 사회를 여는 건강한 힘입니다

## 사멸해 가는 역사의 유물에 의해 산 인간이 심판 받을 수 없다

재판장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승만 정권은 1948년 12월 자신의 열번째 법률로서 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형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이 법률에 의거하여 1949년 한 해만도 11,862명을 검거·투옥하였습니다. 무릇 법이란 현존하는 소유 관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관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계급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1948년 8월 15일 이후 생겨난 그 어떤 법률도 남한 지역에 단독으로 수립된 유약한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데 국가 보안법보다 더 기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후 수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정권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기능하는 이 법의 역할은 변함없었으며, 모두 6차례의 개정을 통해 조항을 늘리고 형량을 높이며 국가 보안법은 날로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른바 공안 정국이라 불리우던 작년 봄 이후 최근에 이르기 까지 이 법에 의한 구속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듯이 국가 보안법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여기저기 나붙었다는 '국가 보안법 철폐 결사 반대'라는 극우 단체들의 플래카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해주



듯이 국가 보안법은 이제 생사의 기로,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을 궁지로 내몬 것은 무엇보다도 성장하는 민중들의 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이며 냉전 체제 와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와 현정권의 '간절한 통일 염원'도 이에 가세하였습니다. 국가 보안법의 반민주적 성격과 위헌적 요소에 관한 논란은 이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을 굴복시킨 1987년 민주 항쟁 이후 전국민적 요구에 의해 국가 보안법은 개폐되어야 할 대표적인 반민주 악법으로 이 법에 의한 그간의 행적은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과거로 고발되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정객들마다 이 법의 폐지와 과거의 청산을 약속하지 않은 자 없었으며, 13대 국회는 이미 2년 전에 원이 구성되자마자 이 법률을 자신이 개폐해야 할 반민주 악법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20세기말에 이르러 평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전세계적으로 날로 확산되고 강화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소련 양 강국을 정점으로하는 양 체제간의 대립·경쟁이 완화되면서 냉전적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냉전 지대인 한반도의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에서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정착은 국내외의 강력한 요구로 제시되고 있으며,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화 통일의 상대방인 이북을 반국가 단체라 하여 타도해야 할 적으로 설정하고, 이북과의 교류를 적과의 내통으로, 이북 문물을 소개하고 긍정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것을 고무·찬양·동조로 낙인 찍어 처벌하고 심지어는 평화 통일을 주장한 사람을 사상이 의심스럽다 하여 잡아들이는 데에도 사용되어 온 국가 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할 아무런 근거도 가치도 없게 된것입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평화 통일을 갈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져가고 그것이 점차 행동으로 표출되면서 국가 보안법의 반 평화 통일적 성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가 보안법이 평화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이라는 인식은 이제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 법의 최대의 수혜자인 현 정권에 의해서도 조성되어 왔습니다. 남북간의 접촉과 교류가 시작된 박정희 정권 당시부터 국가 보안법과의 상충은 통치권의 행사라고 강변되어왔지만, 노태우 정권이 냉전 질서의 와해와 통일 운동의 고양이라는 국내외 정세에 조응하면서 장기 집권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남북 접촉과 공세적인 남북 교류를 시도하면 할수록 통치권 행사 운운은 설득력 없는 변명이 되었고 국가 보안법은 당국자들에게도 족쇄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전국민적 요구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 나아가 현정권 자신의 정책에 의해 국가 보안법의 존립 근거는 부정되어 왔으며 이 법의 완전한 철폐는 시대적 과제로 정당성을 획득하여 왔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최근에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우리는 반국가 단체의 간부이자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연행목 총리가 체포되지 않고 무사히 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체포되면 국가 보안법에 의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반국가 단체 수괴와의 남북 정상 회담을 현정권이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완강히 반대하며 남북 교류에 관한 특별법 등의 편법으로 문제를 호도해 가려던 현정권이 급기야는 '7·20 민족 대교류 제안' 때처럼 국가 보안법의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초법률적 결단까지 내리는 것도 보아 왔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아직 법적으로 생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마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비밀이 아닙니다. 이제 이 법의 정당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이라는 고귀한 이상과 민족적 과제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권위는 그것을 수호해야 할 임무를 지닌 정부 스스로에 의해 짓밟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이름조차 이 법의 가장 완강한 옹호자였던 현정권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은 민자당이 대체 입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사멸해가는 법률에 의해 한 인간의 이상과 고뇌 그리고 수 년에 걸친 노력이 심판받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머지않아 역사의 심판대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그것의 주검이 그것의 범죄 기록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향하게 될 운명에 놓여 있는 국가 보안법에 의해 지난 십여 년 간 민주주의와 평화 통일,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싸워 온 한 인간의 삶을 신문지 너 장 반 넓이의 독방에 하루 23시간 이상씩 가둬 둘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가는 역사의 유물에 의해 산 인간이 심판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소박한 상식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죄다

재판장님!

그러나 국가 보안법이 법적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인간의 사상과 행위를 심판할 척도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었다는 이제까지의 주장이 '국가 보안법에 의한다면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인은 지난 2월 10일 서울 지방 검찰청에 의해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

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인노련에 가입하고 인노련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본인은 본인에 대한 기소 내용 중, 본인이 87년 12월에서 89년 1월까지 인노련에 가입했던 사실과 인노련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던 사실 및 공소장에 기재된 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들을 인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23일 17시경 시내 다방에서 치안본부 대공 수사 대원들에 의해 구속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후 치안 본부의 수사와 검찰의 취조 그리고 서울 형사 지법합의 22부의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은 인노련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적이 없으며, 본인의 인노련 조직원 활동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한 적이 없고 또 이를 이롭게 한 사실이 없으며,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하여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치안본부 수사와 검찰 취조 그리고 1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주장에 대한 반대 증거는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인노련의 조직이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노련 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이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였고, 본인의 표현물 소지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 공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검찰측 주장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국제적인 증거는 결코 한 번도 제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검찰 취조는 물론 치안본부 수사 과정에서 위 기소 내용과 같은 내용



으로 추궁당한 적도 심문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내용을 입증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이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본인이나 검찰측에 질의나 확인 한번 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 조항은 진실과 다르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해 북한은 반국가 단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것이 1심 재판부가 전 재판 과정을 통해 유일하게 언급한 판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1심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과 제목만 다른 판결문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이러한 불성실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박한 상식은 법률과 증거에 의하지 아니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두번째 이유입니다.

**초법률적 관행과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판받을 수 없다**

재판장님!

검찰측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명백한 증거의 제출도 없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할 의사나 시도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데도 불구하고 검찰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배경에는 죄형 법정주의를 수시로 위배할 수 있는 오래되고 무서운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회주의를 자신의 신념으로 하거나 사회주의 이념을 선전하거나 혹은 사회주의적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서는 헌법은 물론 내란 선동죄, 범죄 단체 조직죄, 간첩죄 등 그 어떠한 법률에 의해서도 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활동에 대해 '적을 이롭게 한다'는 국가 보안법 조항을 걸어 그것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처벌하여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오래된 관행입니다.

지난 4월 헌법 재판소가 국가 보안법 7조 위헌 심판에서 이른바 고무·찬양·동조 등 이적 행위·이적 단체 구성에 관한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면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여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제시한 지침은 바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관행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내용을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헌법 재판소가 국가 보안법 7조 위헌 심판 결정문에서 위헌 주장을 배척하면서 적절한 법 해석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우선 국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관한 것으로 헌법 재판소의 결정문은 이에 대해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한 다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법치주의적 통치 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의회 제도·복수 정당 제도·사유 재산제·시장 경제 질서 등의 체제를 파괴·변형시키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 제도·복수 정당 제도·사유 재산제·시장 경제 질서 등을 변형시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이 같은 기준은 7조의 합헌적 해석이 아니라 7조에 명시되지 않은, 7조를 보완할, 7조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비공식적 법률의 제시, 법률적 효력을 발휘해 온 오래된 관행의 명시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병력을 무단으로 이동시키고 그 무력을 앞세워 의회를 해산

하고 의원들을 구금하며, 정당을 불법적으로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며, 의회가 아닌 곳에서 입법 활동까지 해 온 저 5·16쿠데타, 10·17 유신 쿠데타, 5·17 쿠데타 등 기억에도 생생한 군사 정변들이 의회 제도와 복수 정당 제도를 파괴한 죄목으로 처단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헌법 재판소의 '합헌적 해석'이 이후 나타날 수도 있는 쿠데타 등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둘 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조차도 보편적 적용을 자의적으로 배제한, 특정 경향의 정치 활동을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의회 제도와 복수 정당 제도가 군사 독재 세력과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 파괴·유린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러한 반국가적 행위에 사법적 심판이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헌법 재판소가 군사 독재 세력에 의해 술하게 악용되어 온 위헌 법률을 폐기시키지는 못할 망정 간첩죄, 내란죄, 범죄 단체 조직죄 등의 법률로도 처벌되지 않는 사상과 비폭력적 정치 활동에 대한 처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직권 남용이요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의회 제도, 복수 정당 제도가 근대 정치의 진보적 성과이며 사유 재산제·시장 경제 질서 등이 오랜 역사적 근원을 갖고 있는 제도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역사적 노력이 그렇듯이 의회 제도와 복수 정당 제도의 한계와 결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 질서 역시 그것의 온전한 형태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도이며 소폭의 개선이나 질적 변혁이냐를 두고 찬반 양론이 갈라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사회주의의 의회 제도와 복수 정당 제도의 형식적·제한적 성질을 극복하는 정치 체도를 끊임없이 모색해





왔으며 사유 재산제와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의 실현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물론 현실 사회주의 국가는 최근 격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사실상 사회주의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과오와 오류들이 사회주의를 잉태한 전(前)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억압·착취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노력을 무로 돌릴 수는 없습니

다. 사회주의 운동이 '항상 자기 자신을 비판하여 운동 도중에 간단 없이 걸음을 멈추며 이미 완수한 듯한 것에 되돌아가서 다시 새로이 시작하며 자기의 최초 시도들이 불철저하고 나약하고 졸렬하였던 점을 용서없이 철저하게 조소한다'는 것은 이미 140여 년 전에 나왔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민자당의 대표 최고 위원이 레닌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국외 공산 계열의 수괴 고르바초프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한 것이 희극의 한 대목일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 같은 평범한 옹호조차 비극의 첫장이 되어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의 신념 사상이나 실천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는 처벌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법 해석을 빙자한 초법률적 관행과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심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항소를 제기한 세번째 이유입니다.



### 전쟁을 겪은 소년은 이미 소년이 아니다

재판장님!

전쟁을 겪은 소년은 이미 소년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본인도 16살되던 해까지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으뜸가는 진리로 알던 순진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렇

기에 1972년 10월 17일 오후 5시 국회가 해산되었다는 라디오 뉴스를 접할 때 저는 집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제는 의원 내각제와 달리 국회 해산권이 없다는 것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사회 과목의 상식이었고 교과서가 틀렸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평로 국회 의사당 입구를 가로막고 선 탱크와 중앙청 입구의 장갑차들을 보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이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 중 오천석 씨 글에 나오는 '그대의 의견에 동의할 순 없지만, 그대의 말할 권리는 존중한다'는 볼테르의 말을 유달리 좋아했던 저는 그 다음날 집으로 배달된 조선 일보가 전날 밤 태평로 조선 일보사 앞에서 사 들고 온 18일자 조선 일보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을 보고 충격과 함께 이 사회의 비밀을 하나씩 배워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궤변과 유신이라는 폭력에 의해 자유 민주주의의 화려한 깃발이 갈갈이 찢어지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술한 사람들이 구속되는 광경에 치를 떨며 고등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지금 그 소년은 30대 중반의 장년이 되어 국가 보안법에 의해 이 법정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기도 한 자유 민주주의가 유린되던 현장에서 이 길로 들어선 지 십수년만에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자들에 의해 체포 기소되어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해를 가했다는 죄목으로 법정에서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장님!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 네 발로 생활하던 인류의 조상이 두 발로 걷는 데는 수만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술한 고통과 좌절이 뒤따랐을 것이며 때로는 목숨까지 요구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두 팔이 걷는 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인류의 문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성장하는 노동 운동 속에서 새롭게 발현하는 사회주의 운동은 수백만 년 전의 인간의 노력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된 현실이 배태한 자연스런 요구이며 현실을 극복코자 하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문명을 창조할 확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계속 네 발로 기어다닐 것을 강요하는 어떠한 시도도 막을 수 없는 역사 발전의 필연인 것입니다.